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8



2021. 09

만들다



다이내믹, 의정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함께 가는
어울림의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04



16



18



54



58



60



62

국회보

2021 September vol.658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익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이복우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퍼즐은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을 맞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함께 가는 어울림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 12** **여야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16**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
_ 김병욱 정부위원회 간사
“코로나19 이후의 대비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_ 김희곤 정부위원회 간사
-

특집 _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 20** 국회운영위원회 _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_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_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_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_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_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_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_ 박선준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_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_ 이상현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_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_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_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_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_ 최시역 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_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 54** **길에서 길을 찾다** _ 박형수 의원
산과 바다 어우러진 힐링의 고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 58** **칭찬합시다** _ 홍익표 의원
“약속과 책임은 정치의 존재 이유”
- 60** **의원의 좌우명** _ 조태용 의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것’
- 6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정일영 의원
“민생, 경제, 일자리를 위한 정치 할 것”
- 6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K-뷰티 위기대응 방안,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필요성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 70** **법률 시대를 읽다**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 _ 이승재
- 72** **국회 주재관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로 살펴보는 주민소환제도
_ 남궁인철
- 76** **법 시행 그 후**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
- 78** **만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80** **위원회는 지금**
국방위 군 성범죄·사망 사건 질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등
- 84** **국회 뉴스**
- 90** **국회 사람들**
조서연 의전통역관
- 92** **이달의 서평**
신의 화살 _ 서정욱
- 94**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대장장이 출신으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돌궐 민족 _ 이광태
- 98** **수목원 탐방**
포천 국립수목원
- 102** **바이러스의 역사**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결핵’ _ 도현신
- 104** **국회 미술관**
전쟁과 테러의 폭력에 맞서는 찢김의 평화예술 _ 김준기
- 107** **속기록으로 본 이달의 의정사**
본회의 장소를 변경해 처리한 헌법개정안(3선개헌)
- 108**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일상에서 구현해 낸 과학적 원리...조선시대 석빙고 _ 이광표
- 111**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맥문동’
- 112** **대한민국 문학기행**
‘승무’의 시인 조지훈의 고향 주실마을에서 성북동까지
_ 장태동
- 116** **생활 속 우리말글**
‘번역 투를 그대로 써도 될까?’ _ 김형주
- 11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박병석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요청하며 경제외교 펼쳐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6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했다.

박 의장은 이 기간 동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며 활발한 경제 외교를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과 그간의 협력사업 성과 등을 언급하며 박 의장의 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5일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안에 적극 호응했다. 또한 박 의장은 두 나라 국회의
장과의 회담에서 의회 간 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터키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로 공식일정 시작

박병석 의장은 8월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터키 공식일
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
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한인회와 기업들이
잘 단합해서 서로 돕고 함께 노력하며 모범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개척
자이자 민간 외교관이다. 한 팀이 되어 어려운 시기
를 잘 극복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 방문한 알파 콩데 기
니 대통령과도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
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콩데 대통
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박 의장은 “한국과 기니 간 현재 진행되는 협력이
미흡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풍부
한 광물자원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면 경
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기후변화 문제도 언급하면서 태양
력과 풍력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
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특히 “기니 정부가 북한 측과 긴밀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6일 터키 앙카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하고 있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터키 제3국 인프라 건설사업 공동 진출 의견 나뉨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16일 터키 수도 앙카라로 이동해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했다.

박 의장은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차낙칼레 대교가 예정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앞으로도 터키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낙칼레 대교 건설은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3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차낙칼레 대교는 터키 내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전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박 의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양측은 차낙칼레 대교 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과 터키의 방산 협력의 성과를 언급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방산기술 협력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라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회방문단이 8월 17일 터키 앙카라 국회의사당에서 무스타파 켄트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국과 터키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자 박 의장은 “무역을 확대해나가면서 풀어야 할 부분이고 무엇보다 한국의 부품이 터키에 들어가서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만큼 선순환적인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산불과 수해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 터키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8월 17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무스타파 켄트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중견국 협의체 므타(MIKTA)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책임 있는 중견국

리더 역할에 맞게 므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협력하길 희망한다”면서 “므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이스탄불 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박 의장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터키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녹색성장과 디지털 성장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정책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8일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터키와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셴톱 의장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문해줘 매우 반갑다”며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G20, OECD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지지 당부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2024~2025년)과 인권이사회 이사국(2023~2025년)에 한국이 입후보했다”면서 터키 측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18일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과 터키가 굳건한 형제의 나라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주셨다”고 치하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그 기억을 교육시킬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를 끝으로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방문단이 8월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연내 한국서 인프라 사업 투자설 명회 개최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19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있는 대통령관저에서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과 만나 아제르바이잔의 비(非)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카라바흐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이 추진하고 있는 비석유산업과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재처리 화학단지(GPC) 건설 사업, 복합화력발전소(가스)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관심이 많다”면서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에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그동안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카라바흐 재건 사업 등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해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알리에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직접 투자나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에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배석한 람지 테이무로프 주한아제르바이잔 대사에게 연내 서울에서 한국 기업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19일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전시회 개최를 지시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아제르바이잔이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같은 비동맹회원국인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아제르바이잔 국회에서 사히바 가파로바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국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추진키로 했다. 가파로바 국회의장은 “양국 국회 협력을 위해 제도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한-아제르바이잔 국회의 협력을 증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양측 실무검토를 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 중인 한국 경제인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박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그간 쌓아온 양국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가파로바 의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황운하·이수진·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윤창현 의원과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8월 20일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8월 20일 국회 본관 국회 접견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석 사무총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10개 위원회의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비경제 분야 9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는 27일 진행됐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정기국회 기간 중 코로나19 대

응방안과 관련, 지난해 도입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 출입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해 제공하고, 입법 관련 공청회를 활성화하는 등 입법 지원 역량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의원실 의견을 수렴해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전자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위기·기회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대 정기국회 통해 미래의 이정표 세워야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전쟁과 독재, 여러 위기를 이겨낸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명실상부한 G8국가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저력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끄는 선도국가 기틀 마련해야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위기극복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제21대국회가 시작됐고, 이제 두 번째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일하는 국회'를 향한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왕으로 군림하던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도 처리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틀'이 준비된 만큼 여야 공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성과 내기에 진력해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민생·개혁 입법, 미래 입법으로 촛불을 들고 염원하셨던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방역예산, 민생예산, 혁신예산 되어야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민생은 어렵기만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종식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황 타개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기만 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이 위기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편성돼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역예산, 소상공인과 청년, 교육과 돌봄 등 민생이 중심이 되는 민생예산,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갈 혁신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일관된 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군사법원 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 한국판 뉴딜 입법, 백신 허브 국가 도약, 국가균형발전, 불법 하도급 관행 근절 등 국민안전,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안정 등 민생·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위한 민생·개혁 입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여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난 4년 저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혼신을 다해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길이 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매 순간 국민을 위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생 살리는 국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의 길목에서 자행된 날치기 폭거, 강한 유감

제21대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여야 간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의 전통이 완전히 실종된 비정상적인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사실상 180석을 넘나드는 절대다수 의석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당을 상대로 소수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되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제21대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되찾아오는 여야 합의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습니다. 마침내 제21대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길목에서 또다시 날치기 폭거를 행했습니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여야 간 쟁점이 극명한 법안을 무더기로 일방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야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민주당 2중대 의원을 야당 몫 의원이라고 우기는 꼼수를 부리며, 국회법의 협치 정신을 짓밟았습니다.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위기 극복 위해 입법부 권한 제대로 행사할 것

지금 우리 국민은 최악의 민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비현실적인 이념 편향 정책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허약해진 기초체질 가운데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갔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것이 죄가



되어 빗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신규확진자 수효는 한 달 넘게 네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탓으로 OECD 38개 국가 중 백신접종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관치 부동산 정책은 역설적으로 집값, 전월셋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 7월 기준 9억 원을 넘어섰고, 평균 매매값은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는데, 정부는 상반기에만 양도소득세 18.3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부는 세금을 잔뜩 거두어 배를 두둑이 채웠습니다. 정부는 당초부터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지만, 지금 여당은 청와대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정권 비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 4년의 이러한 실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증하고 바로 잡는 데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한 해의 나라살림인 정부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대규모 적자를 겁 없이 감수하면서 확장 재정을 편성한 결과,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12조 원의 슈퍼예산도 부족하다며 코로나 핑계로 4차례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반짝 소비진작 효과만 있었을 뿐이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각종 현금살포식 선심성 예산이 끼워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살리기'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예산심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정권교체로 국민의 삶 지킬 것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생지키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의 위상을 되찾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는 제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Q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여당 간사위원님께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제20대국회부터 정무위원회 활동을 해왔고 제21대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20대국회부터 다뤄왔던 공매도 문제를 포함해 코스피 3천 선 달성 등 최근 2년간 자본시장 이슈가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간사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1대국회 들어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비금융 기관 관련 이슈도 매우 많았습니다.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포함해서 올 상반기 이슈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최근 1년간 처리된 점에 대해 간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간사가 된 뒤로 정무위 법안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야당 간사님과 잘 협의

해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정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뽑는다면 아무래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중, ‘착오 송금 방지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12월에 통과시킨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중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전화들이 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준 것도 의미있습니다. 현행 시가 9억 원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보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라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연금은 집 하나 뿐 실제 생활비가 없는 국민들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해 걱정 없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 현재 정무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현재 정무위의 가장 큰 현안은 ‘머지포인트’입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

심으로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 3년간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머지사태 발생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 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이고,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편의나 편익은 증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만 의존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주식리당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의 이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생범죄를 척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향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무위의 야당 간사님이신 김희곤 의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희곤 의원은 주요 정책 분야에 질의를 하실 때도 항상 전문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법안소위원회 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도 공정한 원칙을 갖고 임하시며 빠르고 정확하게 법안 처리를 하십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신 김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정무위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코로나19 이후의 대비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김희곤 정무위원회 간사(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동래구)

Q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야당 간사위원님께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23개의 기관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관장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활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금융과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들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상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청와대와 국회, 해수부 장관 보좌관 등 여러 기관에서 두루 업무를 보며 국가정책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했던 경험들이 지금 위원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아직도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

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열심히 일하려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삶을 누리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시장의 위협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정무위와 제가 해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여기고 정무위 야당 간사라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정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제21대국회가 개원하고 지난달까지 총 30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무위에 접수된 963건의 법률안 중 178건이 처리됐습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IT기술 발전과 가상화폐로 인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안전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 소통을 통해 조율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상임위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정무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만성적 불황과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늘어난 기업과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액 증가율은 14.4%, 개인사업자는 15.6%를 기록(NICE평가정보 자료)했고, 가계대

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5차에 걸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이는 향후 도래할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금융의 부실화를 가져올 공산이 큼니다.

이 같은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제 주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정무위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적시적소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여러 금융당국, 의원님들과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무위의 여당 간사님이신 김병욱 의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병욱 간사님은 제20대국회 후반기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언제나 활기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셔서 에너지 넘치는 의원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제21대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그동안 쟁점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소통을 통한 원만한 여야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손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쟁점들을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길 바라며 우리 정무위가 '국회 모범 상임위'의 명성을 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제21대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정기국회 준비 상황과 입법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회운영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사법제도 개편과 민·형사법의 주요 쟁점과제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갈등관리 및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과제 모색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극복 위한 경제정책 방향 등 논의

기획재정위원회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래교육 회복'에 주력

교육위원회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RCEP 협정 등 외교 현안과 남북 교류협력 등 쟁점

외교통일위원회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강한 안보 구현

국방위원회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지방분권 강화 방안,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정비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 종사자들 지원정책 모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현 수석전문위원

식량 안보 강화 및 해운 재건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법안체계 개편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백신 수급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환경보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책 추진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여성 경제력 증진과 청소년 안전·지원 강화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회운영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국정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포괄적 업무범위를 가진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이번 정기국회에도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 틀을 규정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후속조치, 인사청문회 및 청원심사 제도개선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후속조치

지난 5월 ‘국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내년 5월 시행¹⁾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국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국회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검토기능을 담당하게 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21대 후반기 국회부터 의원별로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상임위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도 주요 쟁점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공직후보자의 신상 검증에 치중해 정책능력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인사청문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 예비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부담으로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분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인사청문기간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심도 있는 인사청문이 진행되기 어렵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 임명이 가능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위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안,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자료를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하는 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軍)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

최근 군(軍) 내 성폭력 문제 등 군인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안이 계류 중이며,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사항으로 부대 방문조사권, 사망사건 관련 수사 입회 요구권, 군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소속과 권한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원심사제도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청원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 입법 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9년 4월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 소개 없이도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됐으나,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청원권은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 개정 '국회법' : 22.5.30. 시행. 다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4.15.까지

사법제도 개편과 민·형사법의 주요 쟁점과제 논의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국회 개원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사고, 아동학대 및 스토킹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련 입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고, 민·형사 재판절차에 영상재판을 확대함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민생입법에도 노력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법제도 개편문제와 함께 낙태죄 폐지, 상속결격사유 정비 및 차별금지입법 등 주요 민생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1월 21일 처장 임명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정기국회중 위원회 활동에 새롭게 추가된다.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법제도 개편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피해 장병의 인권 보호 측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미 작년 정기국회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에 착

수했는데, 금년 6월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정기국회 직전인 지난 8월 24일 군사법원법 개정안(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군 성폭력 범죄 제외, 서울고등법원의 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군판사 인사제도 개선 및 군검찰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2022.7.1.)을 앞두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사사법체계 개편방안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이첩후 후속조치와 재이첩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이 노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낙태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등 형사법 개정 논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여성의 모든 낙태를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기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양 법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법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낙태를 처벌할지, 사회적·경제적 낙태허용사유를 허용할지 여부 등 낙태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모색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및 존치론과 폐지론을 각각 주장한 국민청원 2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민생법안 심사 준비

제17대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사항도 주요 현안이다.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대하여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의 분배 및 형사처벌을 차별구제조치로 인정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다. 민사법 분야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상속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의 논의가 예상된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의 신속한 확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갈등관리 및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과제 모색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처 및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보훈·경쟁·금융·반부패·개인정보 정책부터 각 부처 정책의 총괄·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가상자산(코인) 거래자 및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입법과제와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 제정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체계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효과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관리기본법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 법률안들은 기존 대통령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공론위원회(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법률 적용 대상인 갈등 예방·해결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지 여부, 규율대상인 공공 정책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금융위원회 소관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코인’으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시세조종, 해킹 등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규율하려는 내용의 5건의 제정안과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건의 ‘특정 금융정보 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및 이용자 보호 등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2006년에 일부 전자지급 수단 및 자금수취·정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이후 현재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핀테크(FinTech) 기업의 등장과 빅테크(BigTech)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 그리고 소비자의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금·결제 등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종 개편, 이용자 수취자금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금융 보안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는 디지털 분야의 공정거래 구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 당시 전자상거래의 주 수단이었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거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공정거래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를 고려한 ‘전자상거래법’ 체계 개편에 대한 입법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극복 위한 경제정책 방향 등 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며 경제·재정 및 조세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향후 경제 정책 방향과 합리적인 재정준칙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및 사회적 경제의 공공부문 적용방안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개정, ‘세법’ 개정 등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규모 및 국가채무 증가를 계기로 국가 채무비율 및 재정수지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정부도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발의안은 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3% 이내로 제한하는 반면, 정부안은 별도 산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 및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안 심사

최근 기업 경영 및 투자 분야에서 트렌드가 된 ESG를 공공기관이나 기금운용 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기국회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SG는 기업 경영이나 투자 등에 있어 수익성 외에도 환경보호 및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5건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지난 6월 1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심사

최근 저물가 추세로 인해 한국은행의 주목적인 물가안정 목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고용안정’의 목표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실물경제의 부양을 도모하는 5건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의 목표에만 치중해 긴축적 통

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목표 간 상충 문제, 정책수단의 유효성 문제, 고용지표의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심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세제지원과 함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세부담 경감액의 상당 비율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상향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함께 심사될 예정으로, 그 적정 공제금액 수준과 적용기한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래교육 회복’에 주력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탐색하는 위원회다. 교육 문제의 근원은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기인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부족과 재정위기, 비대면·디지털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 고교학점제도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비 태세 점검 등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미래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등교육기관 학생 부족과 재정위기

현재 지방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과 등록금 동결 및 수도권·지방대학 양극화 등이다. 2021년도 전체 대학의 입학생 충원율은 91.4%이고, 전문대학의 전국 입학생 충원율은 84.4%에 불과하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 5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확보와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과 학사 운영 구조 다양화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원의 재구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졸업-대입-취업 구조 혁신 정책과 대학이 스스로 혁신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¹⁾.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력격차와 사회성 결핍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학생의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 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분석’을 보면, 서울 시내 중학교 382곳에서 코로나19 이후 국·영·수 과목의 중위권 학생 비중이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 국회는 8월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을 통과시켜 교육회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부는 학생의 교육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도움닫기, 맞춤형 학습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학기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²⁾ 방과후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학습결손이 심각하다. 대학은 온라인 교육 실시와 방역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재정지원 확대 및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대학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요구와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 정착 위한 정책과제 논의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외교·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책과제다.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교원³⁾ 및 학교 공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년 이상의 산고를 거쳐 출범한 교육기구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장치다. 2022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0.5% 수준에 불과하다.

2) 교육부는 지난 6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동력인 과학 기술,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 원자력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데이터 산업·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활성화, 최근 KBS가 추진 중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기본법 제정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올 7월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행정부는 AI+X 7대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 융합·확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데,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데이터댐 구축 등에 대규모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데이터 기본법제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분야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과방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안 3건을 심사중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합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 논의

최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기준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거부·제한 등을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역무 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 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논의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OTT(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방송 산업을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으로 분리해 규정한 미디어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영방송 조직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KBS는 월 2천500원으로 책정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월 3천8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과 함께 과방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개편

한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격형에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를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RCEP 협정 등 외교 현안과 남북 교류협력 등 쟁점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 및 통일 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역내 무역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의 최신 규범 도입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의 외교 현안과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 등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예정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RCEP 협정의 국내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정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향후 전세계 무역·투자규칙을 선도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14%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2.81억 달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거시경제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합해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최신 규범을 도입해 안정적인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 기본법안’ 관련 논의 지속

정부는 기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영사조력 및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지원해왔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제정안 3건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동 법안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또는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고 있어 ‘재외동포기본법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도 주요 쟁

점법안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동 법안은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개발·조성된 구역을 남북협력지구로 정의하고, 이러한 남북협력지구에서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 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 주민 간 접촉에 대해 사후신고가 가능한 접촉유형을 법제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 실시 상황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시설 등의 지역별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재정지원 단체 명확화 및 재정 부담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심사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강화 필요성과 함께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과의 법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강한 안보 구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21~25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리 군을 선진적인 첨단 과학군으로 변혁하기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군의 군사대비태세 점검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군사력 운영, 병무행정, 방위력개선 업무 및 국방 개혁 등 국방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군이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비한 우리 군의 감시·대응태세 유지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 복귀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방역 체계 유지하의 군사대비태세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첨단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등 기존 동맹과의 확고한 연합 방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중기계획 점검 및 '국방개혁2.0' 법제화 논의

아울러 국방부는 '21~25국방중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방개혁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계획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재원규모와 사용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발의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 인력을 확충하고,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군이 '국방개혁2.0'을 통해 달성하려는 각종 개혁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사항

들의 적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법 등 개정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수출·중개허가 유효기간 설정 등이 논의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사업중개업의 등록 제한 사유 강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 등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평화유지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2022.1.1.~12.31.)을 위한 동의안도 제출될 예정으로, 파병의 효과와 파견연장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국방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함으로써 강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 강화 방안,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정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고, 공무원 제도, 경찰, 소방 사무 등을 소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다.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2022년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개정, 재난안전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 소방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및 자치제도 보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2018년에는 지방재정분권의 1단계로 지방소비세 10%p 인상, 3.6조 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소방안전교부세 25%p 인상 등이 추진된 바 있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9일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22. 1. 13 시행예정)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구체화하며, 각급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후속입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지방공무원 관계법률의 정비가 진행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후속입법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 7월 1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고, 자치경찰권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위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경찰대 개혁 등 후속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선거를 위한 법률 정비

2022년 예정된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6.1)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비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논의사항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위한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별 기초의회의원 총정수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시·도 및 자치구·시·군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들 안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화재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술의 개발과 그 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재난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재난에 대비한 자원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소방 사무 중 화재 예방이나 대형화재 대응 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에 지휘권이 부여되는 등 화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방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개 법률로 분법하는 등 소방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 종사자들 지원정책 모색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미디어 등의 정책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중골프장의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사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특성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나아가, 최근 게임·웹툰·웹소설 등 플랫폼 기반 콘텐츠 거래가 확대되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7026호)의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된 심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진흥 체계 마련

다음으로, 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되는 영상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진흥 체계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617호)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OTT 등을 포괄하는 진흥 체계 조성은 현재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지만, 법률 간 중복 규제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영상콘텐츠 진흥 체계 마련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문화예술 분야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주제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도 국악강사포제를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술강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8천620개교에 학교예술강사 5천65명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유사직종인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강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달리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용 및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채용주체,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이 불명확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169호)의 심사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확립 및 유사 회원모집 금지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에서는 대중골프장의 위법한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8817호)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골프장과 달리 회원모집 없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등 이용료와 재산세 감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골프장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과도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회원권 등을 발행해 우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 운영이 문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예약한 순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이용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에서 열거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화산업의 유통질서 확립과 진흥,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식량 안보 강화 및 해운 재건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빨간불이 켜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확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해운 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식량 안보 강화와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과 ‘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어업은 큰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 축제 폐쇄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유통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해 도매시장 위주의 오프라인 구조에서 온라인으로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5월 127.8로 매달 상승해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곡물류 자급률은 1999년 54.2%에서 2018년엔 46.7%로 감소해, 식량 안보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자급률이 낮은 곡물류인 밀·콩·옥수수 등의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허가제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7월 19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및 해운법 개정 논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수의 불완전한 정화처리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양관광에도 큰 타격을 주는 등 수산·해양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산·해양 산업 단체 등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수백 건의 건의문과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문제점 및 수산자원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의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대두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항로 운임 담합 등과 관련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은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도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운법 개정 및 해운항만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법안체계 개편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실물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산업 전반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성장동력 확보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달성은 새로운 에너지원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우선,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한편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상된다.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전환 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8월 초 발표했는데,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중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가지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전환' 부문으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의 중단 여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에 따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에너지전환 추진체계 및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 입지 발굴 및 각종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의 행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석탄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기업환경 대응 위한 법안체계 모색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규율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안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는 등 창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해 창업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에 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과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이 법률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면 체계적·안정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현 경영진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기존 주주 등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백신 수급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소관으로 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사회보장 및 질병 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책 전반을 다루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효과적인 방역대책의 마련과 공공의료 강화, 돌봄공백의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 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제고를 위한 정책 현안들과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변이바이러스 확산 대응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접종 대책 집중 점검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0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해외제약사로부터 차질 없이 백신 물량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장년층의 백신 예약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선결과제 해결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할 때,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접종률 목

표 수준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이에 대한 선구매, 백신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방향 토론

2019년부터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에 대한 검토·분석 등을 통해 향후 추진의 방향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등 정책체계 구체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의결됐고,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시 및 인프라 구축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관련 심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등을 수입으로 하여 보험급여 지출에 주로 사용된다. 2017년 준비금 규모는 20조 7천733억 원에 달했으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비와 방역 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지원율은 10~11% 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 법안 심사 시 활발한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장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정신건강 증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책 현안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법률안, 예산안 그리고 청원을 심사·처리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환경보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환경 분야와, 일 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둘은 다소 다르면서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기본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의 전면개정

먼저,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들에 대한 전면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개정이다.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순환경제를 이룸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생산·유통·소비에 걸친 원료·제품의 순환이용, 순환자원 품목의 확대, 순환경제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있다.

둘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동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제고하고 질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서식환경 등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 이동전시 등을 금지하며 질병 관리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과 음식물쓰레기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대규모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펀드형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셋째, 배달, 가사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데,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책 추진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시·건설 등의 국토 분야, 도로·철도·항공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 및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등이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안’ 심사

국토 분야에서는 우선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이고, 이 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58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건설현장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현장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 제정안은 김교흥 의원이 작년 9월과 올해 6월에 두 차례 발의했는데, 작년 9월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경영책임자(CEO)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산업안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조문들을 보완해 재발의했다. 특히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발의한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 규정이 삭제되어 일부 쟁점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업종 및 분야별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와 '발주자 및 시공자가 근로자 재해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 등에 대해 관련업체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의 실효적 차단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거래정보 수집기반을 확충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확단을 신설해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문화·복잡화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세조작행위·담합·허위정보유포행위 등 부동산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유관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논의

교통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에 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143호, 2021.1.4.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3년 일몰제(2020.1~2022.12)로 운영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안전운임제 존속을 찬성하는 차주(화물연대) 측과 반대하는 화주(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에 따른 위험운행을 근절하고 화물운임의 단계적인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주 측은 운임의 획일화로 인해 업계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차주의 교통안전은 다단계 거래구조 간소화 등의 다른 조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18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의결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했으므로,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의 일몰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 경제력 증진과 청소년 안전·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양극화 심화,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족 형태의 급변과 기후위기 등 한꺼번에 몰아닥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대, 성별, 장애, 이주 등 여러 맥락에서 취약하거나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파동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소관으로 하는 업무에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제고하며 여성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경제력·안전

먼저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개인도 학업이나 취업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자산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을 실효적으로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에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가족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본인 자신의 경제력 차원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가 경제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성의 실직 규모가 더 확대된 문제와 디지털 전환을 보다 충실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되었다.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현행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 강화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의 안전문제는 온·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제기되어 왔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 성폭력, 성매수와 유인 행위 처벌 입법에 힘을 쏟았다.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혐오와 차별 문제, 길거리 여성 폭력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학교제도 밖의 청소년이 쉼터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가 끝나면 시설을 나오게 되고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청소년 보호법’ 상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토와 그에 근거한 제도의 폐지나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

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상으로 금지한 제도이다. 이 사안은 법 규정 제정 당시부터 청소년 ‘보호’대 게임업체의 ‘진흥’이라는 찬반 논란이 지속된 이슈인데, 현재에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의학계와 취약한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단체,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공존·상생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지만 광역 단위의 양성평등센터는 고작 5개 정도여서 입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웠다. 지방분권 강화 방향을 고려하면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전국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센터의 청년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들을 강화해 새로운 세대가 주체가 되는 양성평등 사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정책들은 평등과 인권을 그 기본 가치로 한다.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상생에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요소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이들이 평등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시대 전환기, 제21대국회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성평등 촉진, 다양한 가족의 인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들의 진전을 기대한다. 🏡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

산과 바다 어우러진 힐링의 고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입추가 지나면서 폭염의 기세도 눈에 띄게 꺾였다.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듯하다. 과일과 곡식들이
결실의 계절을 향해 부지런히 성장을 이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경북 영주와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의원을 만났다.



빼어난 풍광 자랑하는 영주 무섬마을

영주에서 일정을 시작한 박형수 의원은 먼저 문수면의 무섬마을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 이름으로, 마을의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인 물돌이 마을입니다. 17세기 중반 반남박씨가 처음 이곳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이후 예안김씨가 들어오면서 두 집안의 집성촌이 형성됐는데, 지금도 약 48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섬마을 앞 강변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외나무다리 건너편으로 울창한 숲이 배경을 이루면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옛날에는 장마로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떠내려가 매년 새로운 외나무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79년 새로 수도교가 설치되면서 사라졌던 외나무다리는 2005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10월 이곳에서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려 지역민들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지요.”

중앙선 청량리~안동역 구간에 올 1월부터 KTX가 운행되면서 요즘 청량리에서 1시간 40분 남짓이면 영주에 도착한다. 단양~안동 구간이 복선화되면 시간은 좀 더 단축될 전망이다.

“예로부터 영주는 경부선과 영동선, 중앙선이 통과하는 철도중심지였습니다. KTX 운행으로 교통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불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서~광주~여주~원주~영주 고속화철도사업이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현재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베어링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세계적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첨단베어링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주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첨단베어링산업단지 유치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영양 31번 국도 도보 현장 점검 나서

영양군으로 이동한 박형수 의원은 “영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3무(無)’의 교통 오지”라고 말했다.

“주진입도로인 31번 국도는 구불구불한 2차선에 절개지가 많아 교통사고와 낙석위험이

큽니다. 장마철이면 잦은 침수로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는 안동까지 가는데 최소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영양 주민들이 31번 국도를 ‘통곡의 길’로 부르며 확포장과 선형개량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8월 5일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계획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낙석위험지역과 침수지역, 선형불량 구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KDI에 제출했습니다.”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시아 최대,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수목원이다.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과 전시원, 백두대간의 상징 동물인 백두산호랑이, 세계 최초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다.

“쉬엄쉬엄 산책하면서 다양한 정원과 식물원을 둘러봐

도 좋고 트램을 타고 포인트마다 내려서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축구장 6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의 호랑이 숲에서는 백두산호랑이 2마리가 살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시아 최대라는 수목원의 규모에 걸맞게 콘텐츠를 보강하고 내년 개관 예정인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숙박시설로 연계해 봉화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산림청이 국비로 조성한 1호 숲길로 2010년 1구간 13.5km를 시작해 현재 총 7개 구간(79.4km)이 운영되고 있다.

“금강산을 비롯해 울진, 봉화와 영덕, 청송 등에서 자라는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곧고 마디가 길며 껍질이 유별나게 붉습니다. 금강산의 이름을 따서 금강소나무라고 부르는데 춘양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결이 곱고 단단하며 굵거나 잘 썩지 않아 예로부터 소나무 중에서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금강소나무숲길 탐방은 숲길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가이드와 동행해야 한다. 탐방객



31번 국도의 낙석위험구간을 점검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오른쪽)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련정원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에서

들에게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밥이 제공되고, 탐방객을 위한 숙소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울진의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원전문제를 지적했다.

“신한울 1, 2호기는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가동이 예정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부 설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운영허가 승인 후 실제 가동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되므로 문제된 설비의 철저한 성능 실험을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내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해 최근 신한울 1호기의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의 경우 세수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허가와 함께 사업이 중단된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풍부한 자연환경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할 것”

20여 년간 법조인의 길을 걷다 제21대국회에 입성한 박형수 의원은 “영주와 영양, 봉화, 울진을 우리나라 최고의 치유관광단지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숲이 가진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합니다.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은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봉화의 백두대간수목원,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 등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과 울진 죽변해안 스카이라일, 후포등기산 스카이워크·해양치유단지 등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해 휴양과 치유를 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역 현안도 열심히 챙기면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양산시갑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갑)

9월호 ‘청찬합시다’ 주인공은 홍익표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윤영석 의원은 “여야 수석 대변인으로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현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민한 사안에도 단 한 번도 꺾고려운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제19대국회부터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정치시사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며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격의 없이 나누는 사이”라면서 “동년배 정치인의 따뜻한 격려가 너무나도 반갑다”고 환하게 웃었다.

“약속과 책임은 정치의 존재 이유”

첫인사와 함께 건네받은 명함 속 이름 옆에 ‘정치학 박사’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홍익표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통일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정치경제 현안의 전문가로 불렸다.

“정치와의 인연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재직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19대 총선 당시 선거일 21일을 앞두고 성동을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게 됐죠.”

당시 상대 후보가 현역 의원이었고, 열세로 꼽히던 지역이라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불과 0.8%p차로 당선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외교통상위, 국회운영위, 여가위, 산자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 예결특위, 가슴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올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2021년 1차 추경 통과와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을 추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가 만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상생과 연대로 해소하자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로 영입에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두 법안은 상임위 계류중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더욱 신경 쓸 예정입니다.”

또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온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일지정제 휴일이나 모든 국민의 휴식권 보장

이 담기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은 '성동구'

홍익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빠른 발전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지역이다. 폐공장들과 가죽공장이 즐비했던 곳이 인프라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으로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발전의 한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것이 뿌듯하지만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욕심도 생기네요. 성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총선 당시 지역구민들에게 서울숲을 지역구민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부지를 문화예술관과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 중이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GTX-C 왕십리역 신설이 유력하여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용혜인 의원을 칭찬합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과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정치신인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까' 궁금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꼼꼼하게 질의를 준비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동료의원으로서 든든했고, 청년세대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열정과 책임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유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것’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이 된 명료한 삶의 원칙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외교부 북미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대미·북핵 외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조태용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제가 외교부에 근무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라크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1990년 2월에 이라크로 갔는데 그해 8월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제가 마지막 즈음에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떠난 상태였는데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미 이라크 공항은 폐쇄된 상태였고 본부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훈령을 받아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곧 철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버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는 이라크인데 서울에 있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려니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것 같아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태용 의원은 이라크로 돌아갔다. 10월 말쯤 이라크에 도착했고 이듬해 1월 대사관 전체가 다 같이 한국으로 철수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돌아간 것이 외교부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마음이 편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 덕분에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신

말해주는 사건이었고 그 후에도 알게 모르게 그 일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당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경험 덕분에 그다음부터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더라도 마음 속 기준이 단순하고 명료해졌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군요. 흔들리는 배에서 든든하게 잡을 수 있는 닻이 하나 생긴 느낌이랄까요. 그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라는 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한미고위급협의회 한국 측 대표로 대북제재시스템 구축

조태용 의원은 38년간의 외무공무원 생활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당시 담당했던 대북협의회 활동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한미고위급협의회를 만들기로 해 한국 측에서는 제가,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 나섰습니다. 2016년부터 대북협의회를 가동해 1년 남짓 5번 회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압박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그때까지 별 효력이 없다가 2016년 제재결의안부터 북한 경제, 특히 북한 정권의 외환가득능력을 정조준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조태용 의원은 지난해 1호 법안으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9년 디도스 사건 이후 청와대는 물론 언론·금융사 전산시스템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한국수력원자력,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하는 등 사이버 공격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은 공공과 민간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사이버공간상의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초당적인 법안이기에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여야가 이 법안을 본다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태용 의원은 “외교나 안보는 선거 이슈나 표가 되지 않아서인지 국회도, 국민도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중국이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안보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30년 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입지를 좋게 만들고 선택지를 늘려야 합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안보에 대한 국회 및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임진환

“민생, 경제, 일자리를 위한 정치 할 것”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관료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의원은 제21대국회 초선의원으로 ‘국토·경제통’이다. 행정고시 23회 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배움의 끈도 놓지 않아 옥스퍼드 대 경제학 석사, 리즈대 경제학 박사 학위도 갖고 있다. “섬김과 소통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충남 보령에서 화목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정일영 의원은 유년 시절에 대해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사

랑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동네 의용소방대장도 하는 등 지역과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았고, 살림과 요리 솜씨가 빼어났던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 때마다 동네에 시루떡이나 백설기를 만들어 돌렸다. 그가 열 살 무렵 외조부는 교육을 위해 손자를 서울로 불러들였고 외조모는 새벽같이 일어나 매일 다른 반찬으로 손자의 도시락을 두 개씩 준비하는 등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셨다. 대학 시절에도 그의 점심 도시락을 챙겨 주셨다고 한다.

까만 고무신 신던 '시골 촌놈'이 서울로 유학

정일영 의원은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왔다. 영등포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시골에서 신던 새까만 고무신을 신고 책가방도 아닌 보자기로 된 ‘책보’를 들고 다니니 당시 친구들이 보기엔 제가 신기한 ‘시골 촌놈’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명문중 입학에 위해 서울에 왔지만 6학년 때 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평준화로 당첨된 학교에 가야 했고 이후 당시 4대 명문고 중 한 곳이었던 용산고를 거쳐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정치였어요. 유신 정권 말기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졸업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교수님들의 공부 권유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선택의 여지 없이 공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정 의원은 사무실보다 현장을 즐겨 찾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 그의 별명은 ‘등산화 사장’이었다. 당시 인천공항은 국가 관문을 관리하고 매일 20만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조직 구성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제2여객터미널 완공을 앞두고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이후 ‘1만 명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장애물이 없진 않았지만 노사 간 갑

과 을이 아닌 ‘우리’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오랜 고민 끝에 정치 결심...“나쁜 정치인 안 될 것”

정치 입문 결심에 대해 정 의원은 “10년 전부터 제의가 있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심했는데 아내가 두 가지 당부했다. ‘일단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쁜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고 말했다.

“제게 제2의 고향이자,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송도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선 이후 끝없는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7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그는 “GTX-B 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800병상 규모로 2026년 준공될 송도세브란스병원도 지난 2월 기공식을 가졌다”며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송도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KTX 열차와 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등 철도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바이오 랩허브’ 송도 유치에 성공한 그는 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가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입니다. 국민들은 권력 다툼보다 피부에 와 닿는 민생, 경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뛰겠습니다.”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K-뷰티 위기대응 방안,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필요성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성장을 이룬 한국 화장품산업이 최근 수년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족과 소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K-뷰티의 최근 5년간 수출 성장률은 26%에 달한다. 2019년 화장품 수출액은 7조 6천86억 원으로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K-뷰티는 중국의 기술추격과 자국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K-뷰티의 위기 해결과 차세대 글로벌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산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황재성 NCR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 규제 강화, 수출경쟁력 상실 위기 등으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산업은 혁신성과 창의성은 높으나 ‘원천기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활성소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미래형 기반기술 개발은 정부 지원의 산업-정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허약성을 지적하고,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화장품산업 수출 강국으로 올라섰음에도 2000년 초반까지 지식(인적 자본)·기술·제도 등 혁신 원천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데이터의 편중, 화장품산업으로서의 연구 부실, 전략·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단장은 “K-뷰티는 브랜드 기업과 OEM/ODM의 커플링으로 혁신 원천이 혁신 자원으로 전환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 원천 중에서 다양화할 수 있는 원료와 기초소재 발굴, 혁신기업 육성과 공공분야와의 기술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그동안 수출 효자산업으로 2020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꾸준한 R&D 투자와 중국시장을 필두로 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피부과학 원천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대응 방안이 마련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필요성 토론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관과 검사 인사에 대한 외부 평가의 당위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판·검사 인사평가제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법관과 검사 인사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각각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연임 등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제도는 법원과 검찰청의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는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확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중하게 인사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많은 주(州)에서 법관을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변호사가 주축이 된 법관평가위원회 등이 유권자에게 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재량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고재판소 판사를 재판관 출신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행정관, 외교관 등을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였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평가를 법관이나 검사 인사에 반영한다면 사법권에 다소 부족

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적 정당성의 간접적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은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받는 교수평가제도를 예시로 들며 판·검사 평가에 있어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박기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서기관은 “법원 측에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외부평가를 인사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법관 평가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 중복평가 방지문제 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 의원과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과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법관 연임심사와 검사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며 “판사와 검사 인사를 전적으로 그 기관 내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구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를 ‘제 식구 감싸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소와 법관의 재판 행위 역시 가능한 한 공개되고, 진행 중 또는 사후에라도 엄밀하고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토론회 의견들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의 열쇠, 새로운 교대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김민석·고영인·장철민·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강은미(정의당) 의원,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8월 11일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의 열쇠, 새로운 교대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근무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모형 추진, 플로팅 간호사(floating nurse) 채용,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제 등이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교대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표준모형으로 추진하고, 전 병동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폭 개선된 교대제를 적용하고 있고, 환자와 간호 인력의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병원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배치 모형 개발 필요성도 제안됐다.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어렵고, 중증도는 낮지만 ADL(일상생활동작)이 문제가 되는 환자가 많다.

김 교수는 “참여가 저조한 중소병원을 위한 세부

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정규직을 전제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갑작스러운 병가가 생기면 비번인 간호사를 부르는 것이 아닌, 플로팅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교대제의 경우에는 낮번, 밤번 업무를 병원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모든 간호사에게 근무 형태의 선택성을 부여해야 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제도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내비쳤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결국은 인력 증원의 문제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표준모형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인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대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무 자체를 패턴화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근무 형태만 바꾸면 부작용이 있어 인력 충원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고민 중”이라며 “노동계와 병원계, 간호계와 논의 중이

며 조만간 정부가 안을 마련해 전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간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는 국민건강 보호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간호업무 특성상 야간근무와 교대제가 필수지만, 제조업과는 다르게 야간업무와 교대제가 조별이 아닌 개인별로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대 근무자와 간호사의 임상 현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환자 곁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8월 12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활동반자법’은 1인 가족과 동거가족 등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을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등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지 못한 뒤 국회에서 7년 만에 재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인식과 가족 구성이 바뀐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베이직페미 노서영 위원장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69.7%)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변화한 가족 인식에 맞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도 밖 가족이 겪는 차별적 현실과 제도적 배제를 비롯해 현행 가족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가족상황과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의미 정립, 민법의 편제 개편 및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범위 규정 삭제, ‘사실혼’ 개념의 변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들었다.

또한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성인 2인’이라는 법적 틀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동성혼에 대한 반대에 어떻게 맞서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가족’을 중심에 두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형태주의적 접근을 비판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이 혼인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과 파트너십 중심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라며 “이미 10명 중 7명의 국민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의 복지제도는 청년대출, 신혼부부대출, 아동수당으로 삶의 코스를 정해두고 있는데, 특정한 생애 모델을 국가가 우대해선 안 된다”며 “혈연·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커플, 동거하며 서로를 돌보는 노년층 등 모든 동반자 관계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비혼·동성결합·가족차별 등에 대한 더 많은 응답을 국회에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8월 17일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사회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은 모빌리티가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자동차에 적용되면 자율주행차, 드론에 적용되면 자율주행 드론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자율주행 시장규모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까지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의 장점과 함께 완전 자율주행 시대 도입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이 보급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적의 경로를 인공지능(AI)이 찾아서 주행하기 때문에 주행 시간이 감소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의 장점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졸음, 부주의 등 차량 운전자들의 실수 및 과속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이 실현되면 차량 운전자

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는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구분해 사용한다. 레벨 3은 일정 조건 또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게 되며 레벨 4는 제어권 전환이 필요 없이 작동 구간 내 운전 주시가 불필요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레벨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와 레벨 5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송언석 의원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으로 가기 위해 도시 인프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자동차 자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로 시설물, 관제센터에서의 충분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손꼽힌다.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확산과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자율주행의 기준 및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리 윤성혜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과 청년 및 학부모가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전문)대교협,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도 제도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발표된 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제19대국회(2012.5.~2016.5.) 이후 제20대국회(2016.5.~2020.5.)와 제21대국회(2020.5.~)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됐다¹⁾. 특히 제21대국회에서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해, 토론회(2020.11.), 공청회 2회(2020.12., 2021.2.), 안전조정위 심의(2021.2.~2021.5.)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6.10.) 의결과 법제사법위원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회 심의(6.30.)를 거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쟁점과 내용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제고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교육위원회 설치목적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과 성격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섰다. 자문기구로 하려는 입장은 선출직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위원회 조직에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한다면 교육정책이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대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면서 교육부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의 미세조정(fine tuning)을 거쳤고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발족했다. 위원은 21명으로 구성하되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의미와 과제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정부(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

1) 제19대국회: 이용섭 의원(2012.10.) / 제20대국회: 안민석 의원(2016.7.), 박경미 의원(2017.6.), 유성엽 의원(2018.5.), 조승래 의원(2019.3.), 전희경 의원(2019.9.), 박홍근 의원(2016.6.) 제21대국회: 안민석 의원(2020.6.), 정청래 의원(2020.7.), 유기홍 의원(2020.9.), 강민정 의원(2020.9.), 정경희 의원(2021.1.)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로 살펴보는 주민소환제도



남궁인철
국회 LA주재관

인구 4천만 명으로 미국 내 최대 인구 지역, 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세계 5위권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Christopher Newsom). 2003년 역대 최연소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이어 2018년 62%의 압도적 지지율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기후변화·오바마케어·이민 정책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촉망받던 그는 오는 9월 14일 예정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면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2019년 주지사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래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전의 주민소환운동과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북가주의 한 경찰이 뉴섬의 불법이민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제기했던 ‘리콜 뉴섬(Recall Newsom) 캠페인’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섯다운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했고, 작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정작 본인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측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환을 위한 서명 참가 인원이 급증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최종 집계 결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9월 14일 특별선거가 결정되었다.

정치적 절차로서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Citizen Recall)제도는 주민들의 투표

에 의해 임기 만료 전 관료를 교체하는 제도다. 탄핵(Impeachment)은 법적 절차로서 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특정되어야 하고 통상 지역 의회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반면, 주민소환은 정치적 절차로서 소환 사유가 특정될 필요가 없으며¹⁾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최초로 주민소환제가 시작된 것은 1903년 로스 앤젤레스였고 주 정부 관료에 대해 채택된 것은 1908년 미시간 및 오리건 주가 최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 및 워싱턴 D.C. 지역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州) 하위의 지역 정부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민 소환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애리조나·네바다 등 3개 지역은 모든 주 정부 관료를 소환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콜로라도·미네소타 등 8개 지역은 모든 선출직 관료,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 등 6개 지역은 선출직 중 판사를 제외한 관료를 각각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 소환 절차는 각 주 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사항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주민의 청원,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 유효성 검증, 주민 투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환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서명 수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주지사 소환 투표가 실시되는 캘리포니아는 해당 관료를 선출하기 위한 직전 선거 유효 투표 총수의 12%를, 애리조나·콜로라도·미시간·네바다 등은 직전 선거 유효투표 수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캔자스는 무려 4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투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소환제도 도입 이후 주 상·하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총 39차례 실시되어 20명의 의원이 소환된 바 있다.

주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건 총 3차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소환된 사례는 2003년 당시 민주당 소속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물러나고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당선된 게 유일하다.

주민소환투표 진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캘리포니아 등 7개 지역에서는 주민소환의 대상과 그 승계자(또는 대체자)에 대한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투표 용지의 첫 번째 항목에서 대상 관료가 소환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두 번째 항목에서 대체 후보자를 고르게 된다. 나머지 12개 지역 주민투표에서는 소환 여부에 대해

¹⁾ 다만, 알래스카·조지아·미네소타·버지니아 등 8개 주는 주민소환의 사유를 주 헌법 등에 명시하고 있음. 지역별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recall-of-state-officials.aspx> 참조.

여만 투표하고, 소환이 결정되면 이후 별도의 특별선거를 통해 대체자를 선출한다.

점점 높아져가는 소환 가능성

지난 2000년 이후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당선됐고, 2020년 실시된 선거에서도 총 53석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 중 42석을 민주당이 차지할 정도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 소위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에 해당한다.

이런 점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소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순 이후 섰다운 조치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재개,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및 주택 임차료 지원 등 대대적인 세금 환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 주지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됐고, 2003년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체 후보가 없다²⁾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실제 소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소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7%p 높았으나³⁾, 7월 여론조사에서는 소환 찬성 47%, 반대 50%로 그 격차가 줄

어들었고 가장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⁴⁾에서는 소환 찬성이 51%로 반대 의견(40%)보다 11%p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7월 이후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재개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소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반면 현 주지사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유인이 있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위험 기피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정부는 8월 중순부터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촉발된 주민소환운동이 미 역사상 두 번째의 주지사 소환 사례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이전의 6번의 시도와 같이 불발로 끝나게 될지 미 정가(政界)가 주목하고 있다. 🏠

2) 대체 후보로 최종 등록한 인원은 민주당 9명, 공화당 24명을 포함해 총 46명이며, 이 중 유명 유튜버 Kevin Paffrath(민주), 2018년 주지사 후보 John Cox(공화), 라디오 진행자 Larry Elder(공화), 전 샌디에이고 시장 Kevin Faulconer(공화),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 Caitlyn Jenner(공화) 등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 기록.

3)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5월 9일~18일), 소환 찬성 40%, 소환 반대 57%.

4) SurveyUSA, KABC-TV Los Angeles 등 공동 주관, 8월 2~4일 실시.



대한민국 의정 종합채널
NATV가 만듭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랑

법을 베테랑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일상 속 법 이야기

지금까지 없었던 재미있고 유익한
법을 버라이어티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패널 신유진(변호사)
전민기(빅데이터전문가)



진행 김현욱 아나운서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2020. 8.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지난해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23세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선수는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팀 주치의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 사실을 알리고자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 경찰 등에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는 지난해 8월 4일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체육계 폭행과 인권침해 등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 내부에서 진행됐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가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

권 전담기구에서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신고인의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요청과 수사기관에 고발, 요청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상담 889건, 신고 300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116건(수사



2020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의뢰 4건, 징계요청 16건, 감사의뢰 1건, 기각 5건, 각하 88건, 권고 2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분야 신고 현황을 보면 폭력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인권 침해(욕설, 집단따돌림 등)가 31건, 성폭력·성희롱이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해 훈련장,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매년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 선수 및 학부모, 실업 프로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을 개선했다. 실업팀은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

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도 강화됐다.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 문체부 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와 지도자, 심판, 체육회 임직원 등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체육단체 체육지도자에게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법정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최태웅 교육홍보팀장은 "전문가들은 체육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박민선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3 의결
본회의 2021-07-24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방위 군 성범죄·사망 사건 질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등

국방위 대표단, 미 하원 군사위원장 면담 등 방미 외교활동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귀국했다. 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했다.

대표단은 7월 27일과 28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Andy Kim) 하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아담 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했다.

대표단은 7월 29일과 30일 호놀룰루를 방문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월스바흐(Kenneth S. Wilsbach)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국방위, 군 성범죄·사망 사건 질타

8월 20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군 성범죄·사망 사건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력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군합동위원회 내 군장병들의 출사퇴 사태에 대해 그는 “기구 운용이 형식적이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아니냐.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익 위원(국민의힘)도 “공군 사건 당시 낱알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되어간다.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설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부대별로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군을 포함, 성범죄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신원식 위원(국민의힘)도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면서 부대관리 훈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위원(국민의힘)은 “공군 사건 이후 전 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다”며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장관의 무능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8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대체토론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담 기준 수립의 필요성,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의 지속,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야 위원들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8월 24일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 위원과 서정숙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했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진술인들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간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제정안들의 입법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강주성 활동가는 시대변화에 따라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승연 연구실장은 의료기관 중심의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홍승진 팀장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영역을 새로운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의 통합적 보건의료 법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직역단체 간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의 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간호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안과 연관된 직역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정법률안에 간호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문화하는 것이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의를 중재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의료현장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직역간 업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

기획재정부(위원장 윤후덕)는 8월 25일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일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으로 책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4% 올랐고 주택가격도 30% 상승했다. 비과세 기준이 13년간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혜영 위원(정의당)은 “양도세 12억 원 기준을 적용받는 가구는 3.6%뿐”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낮추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쟁점이 됐다. 유경준 위원(국민의힘)은 “다른 곳의 집값도 올라 지금은 이사 가기도 힘든데 장특공제까지 올리냐”며 “집값 오른 게 서민 잘못이 아닌데 세금을 올려 더 증세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올해 안에 집행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8월 13일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제21대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17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7월 30일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제37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천701명이 지원해 231: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8명, 재경직 6명, 법제직 2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만 나이)은 26.1세로, 지난해

27.5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7년생(34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생(22세)이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총 7명으로 41.2%를 차지해 지난해 3명(17.7%)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법제직(2명)과 사서직(1명)은 모두 여성이 최종 합격했다.

국회 인사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1급)



- 오현고,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학사
- 중앙일보 부국장, 통일문화연구소장,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JTBC심의실장,
-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국회도서관, 임채정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8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아홉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구술은 말로 개인의 경험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이야기의 맥락을 완성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역사를 보완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두 번의 투옥 생활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정 종식이 실패함에 따라, 제도 정치권과 결합해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갖고 제14대국회에 등원했다. 이후 제17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임채정 의장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구술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술집에는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남북 간 합의의 법적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의미 있는 법률 제정의 뒷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 외교의 강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국회의 역할, 개헌과 정치에 대한 임채정 의장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 활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평가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다양한 사진 자료를 기증해주신 임채정 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제18차 '시와 국회포럼' 개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8월 18일 '메타버스 속의 나는 누구인가'라



는 주제로 제18차 '시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과 연결의 가상융합 플랫폼이다. 게임, 영화,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실감형 콘텐츠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시와 국회포럼'은 한양대 박종일 교수,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티모시 정 석좌교수,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김범주 본부장이 참여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현황, 해외 정책동향, 분야별 활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산업도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아바타나 가상인간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8월 17일 '2020

NEWS



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8.8조 원, 총지출은 549.9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71.2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2.0조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국가채무 잠정치는 84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3.7조 원 증가했다.

이번 결산분석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성장산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재난지원금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해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 및 사업별로 각 부처의 집행 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했고,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및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과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8월 17일 발간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478.8조 원으로, 2019년(473.1조 원)에 비해 5.7조 원(1.2%) 증가했고, 2020년 예산(470.7조 원)을 8.1조 원(1.7%) 상회했다.



최근까지 총수입을 견인해왔던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민간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조 원(△2.7%) 감소한 반면, 국세외수입은 최근까지 지속된 감소세를 벗어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 원(6.3%),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2.2조 원(7.9%) 증가하면서 2020회계연도 총수입을 견인했다.

2021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며, 우리 경제 또한 경제 주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는 2020회계연도 총수입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2020회계연도 총수입을 개관한 후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에

대한 세목 또는 항목별 분석과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월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 방안을 함께 담은 것으로,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13번째 발간됐다.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정책자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595건의 현안을 분석했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결과 90건을 심층 평가했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코로나 국면에 따라 대면감사 등이 어려운 제약을 보완하고,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변화와 법·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제를 선별하는 등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다양한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누어 수록했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한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자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0일 이원욱·윤관석·박성중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데이터에 관한 법률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내 법률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

NEWS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자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데이터만큼은 세계적인 부국과 강국이 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자원적·자산적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 각 부처는 기존 법률을 적용한 데이터 관리의 한계가 큰 상황이므로 오히려 적절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기성 과장은 토론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의 '데이터 자산' 개념과 권리 도입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과장은 산업 데이터, 특히 다양한 장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허청 남영택 과장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은 본래의 목적과 보호범위가 데이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한 이슈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본부장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에 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데이터 활

용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다.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4·25호, '국제전략 Foresight' 3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제25호(여기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3호(미중기술패권 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를 8월 발간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24호 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시나리오로는 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25호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행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제전략 Foresight' 3호 저자인 차정미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두 요소로 분석하면서, 미중 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자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혁신, 기술연대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연대 전략 수립을 위한 '정-산-학-연(政-産-學-研)간의 통합적 전략소통과 협력이행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하는 '국제전략 Foresight'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과정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한 제2회 국회미래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8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 총리)가 발제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

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송해덕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참여했다.

김신일 교수는 '미래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발제했고 토론자들은 '시대전환기(코로나·AI·고령화시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은 가능한가?', '국민 개개인의 인생을 위한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교육과정·제도, 평생학습, 직업·진로교육, 디지털 교육혁신, 해외 교육개혁 사례, 미래교육 정책 측면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전망과 대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아 다르고 어 다른’ 통역, 매끄러운 의미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



조서연 의전통역관
국제국 의회의교총괄과

Q 국회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입사 전에는 부산대 앞 파고다어학원에서 타임(TIME)지 독해, 토익, 토플 등을 가르쳤습니다. 2002년 부산비엔날레가 출범을 준비할 무렵 파고다 학원 동료 강사가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일하는 친구 부탁이라며 개막식 사회 통역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겁 없이 수락했죠. ‘생애 첫 통역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후 부산국제모터쇼와 자동

차부품박람회에서 통역을 두 번 더 했습니다. 부품박람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외국 바이어들 간 수출 계약 성사를 지원하는 일을 맡았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열심히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아저씨들의 말을 통역하면서 묘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 번 통역 경험을 하고 나니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 통역사로 일하려면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지원하고 싶었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서울에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KTX 사업이 완료되면서 ‘꿈의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통번역대학원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짐작도 못한 채 KTX로 오가며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덜컥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대학원 2년 내내 금요일 밤 부산으로 내려가고 월요일 새벽 첫 기차로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돈 안 벌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좋아서 진짜 원 없이 공부했어요.

졸업을 한 달쯤 앞두고 대학원 원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국회에 통역관 자리가 났는데 지원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인데 돈보다는 명예로운 일에 능력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마음을 굳혀 국회에 지원했고 2008년 1월 21일 대망의 첫 출근을 했습니다.

Q 통역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국회 영어 통역관은 총 다섯 명입니다. 모두 의회의 교총괄과 소속이지만 근무 부서는 총괄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아프리카과, 국제회의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국제회의과에서 근무합니다. 국회의장 공식 순방과 의회 간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국내에서는 국회 방문 외빈 통역과 의회외교 관련 문서 번역을 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A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은 최근 몇 년간 국제회의에 참석을 잘 안하는데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의회연맹(IPU) 회의에 가면 북한 대표단과 자주 마주했습니다. 몇 번 만나 서로 얼굴을 아는 수행원들도 있었죠. 한번은 통역 잘 들었다고 인사하길래 한국어 채널로 우리 통역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3년 몽골 의회가 동북아여성의원포럼을 주최했는데 환영만찬장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대표단별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남북한 대표단이 함께 무대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불렀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제가 마이 크로 가사를 통역했구요. 남북한 대표단은 물론이고 참석했던 동북아 의회 여성의원들 모두에게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습니니다.

국회 방문 외빈 통역 경험 중에는 2017년 11월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연 기억에 남습니다. 국회의장님 환담과 국회 연설이 모두 끝난 후 국회의사무총장님을 따라 배웅 인사를 나갔는데 차량 탑승 직전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눈을 맞추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사실 국가나 정부 수반급 인사의 경우 통역사 존재에 대해 의식

하고 있다는 표시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Q 코로나19로 통역관 업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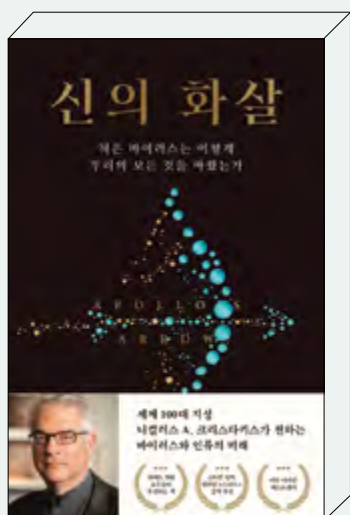
A 변화가 거의 상전벽해 수준입니다. 우선 출장 횟수가 급격히 줄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 평균 5·6차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2019년에는 6번 해외 출장을 갔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장 스웨덴 공식 순방에 딱 한 번 나갔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대신 줌이나 웹엑스를 이용한 화상 통역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화상 통역은 대면과 비교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소리가 울리거나 연결이 끊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면 환경에서는 몇 차례 통역이 오가고 나면 통역사와 화자 간 신뢰와 친근감이 형성되면서 소통이 편해지는 타이밍이 오는데, 화상 세팅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양측 시차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죠. 통역사가 '야'로 옮길지 '어'로 옮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쪽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한 내재된 지식뿐만 아니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언어 스킬 연마, 맥락 이해에 필요한 자료나 관련 배경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은 통역 행사가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변함 없는 목표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신의 화살 : 작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는가



저자 |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예일대 휴먼네이처연구소 소장)
 역자 | 홍한결
 출판사 | 월북
 출판일 | 2021. 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나와 가족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동네 자영업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정치와 방역 당국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질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술 논문과 권위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조해도 암울한 소식뿐이다. 이럴 때 최신 정보나 옳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진다. 의사나 과학자의 글보다 사회학자, 철학자의 글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신의 화살’의 저자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는 예일대학교 휴먼네이처연구소 소장으로 네트워크 과학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감염병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현재 진행형 공중보건 전문가다. 자신의 경험과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함께 역사적, 사회학적 통찰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복잡한 사건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용이 어렵고 독자에게 혼돈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동안 영화 한 편을 보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쉬운 문장과 재미있는 사례 제시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매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일곱 가지다. 사스-1, 사스-2, 메르스 그리고 4가지의 감기 바이러스가 그들이다. 2003년의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염병 팬데믹이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엄청난 사망자를 내면서도 아직 인간이 멀

망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파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8월에 출간됐지만 에필로그가 추가되면서 2021년 6월까지의 최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화, 집단 이주, 항공 교통, 인구 증가, 대도시 인구 집중은 감염병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 과연 감염병의 위협을 인지하고는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감염병도 인간이 만드는 인재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감정과 거짓 정보의 유행은 그 바탕에 깔린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각국의 보건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팡질팡, 무원칙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감염병과 팬데믹에 대한 공공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역경 속에서 보이는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 반응은 슬픔과 비판,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였다. 우리 앞에 과연 어떤 험로가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마주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급한 대책 수립과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도 신경을 써야 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온갖 거짓 뉴스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행동은 분명 개인의 잘못이지만, 해결 방안은 사회적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내성(회피 능력)을 획득하기 전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백신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백신을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바이러스에게 회피할 수 있는 변종 출현의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치 않는 질병에 대해 생물학적 종식을 추구한다. 생물학적 종식이란 집단면역에 이르거나, 병원체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인류의 저항력이 강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미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등의 성공 사례가 있으며, 지금도 의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질병으로부터 생물학적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럴 때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을 인간의 관념이나 행동이 몰아가는 사회적 현상으로 본다면 사회적 종식의 형태로 타협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공포와 불안과 사회 경제적 혼란을 가라앉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사회적 종식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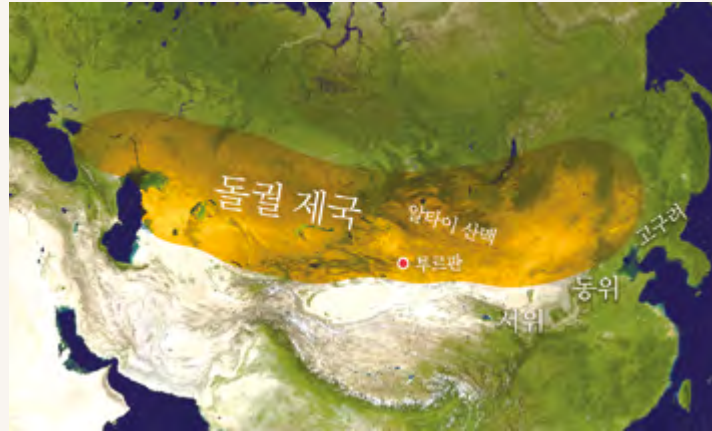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행동이 심각한 위험인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의 특징을 잘 알고 위험에 처한 동료를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암울한 소식에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대처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좋겠다. 🍵

글 서정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서울대 의학 박사

대장장이 출신으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돌궐 민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돌궐제국은 '투르크' 또는 '튀르크'로 불리며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던 세계 제국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돌궐도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한 산골 구석의 소집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과연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돌궐 민족이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능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시작은 보잘것없었으나 세계적인 제국을 이룩한 돌궐-튀르크제국에 대해 살펴본다.



돌궐제국 지도

돌궐(突厥)은 유라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투르크어 또는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스스로의 조상으로 여기는 민족이다. 현재 터키, 중앙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러시아의 타타르, 바쉬키르인, 중국의 위구르인 등 인구로 따지면 거의 1억 7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궐, 즉 '튀르크'의 후손임을 자처한다. 이는 돌궐제국이 유라시아 초원지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한 대제국을 세웠고, 그 결과 그 후손들이 유라시아 곳곳에 흩어졌기 때문이었다.

돌궐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튀르크'가 당시 발음이 유사했던 유목 집단 철륵(鐵勒)이나 정령(丁靈), 또는 돌기시(突騎施) 같은 집단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강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고대 튀르크어로 뿌리를 나타내는 '튀리'라는 단어에서 '뿌리 있는', 즉 '고상한' 정도의 뜻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

나 어떤 경우에서도 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사서 '주서(周書)'에는 돌궐이라는 명칭이 그들이 거주했던 알타이(Altai)산맥의 산 모양이 투구처럼 생긴 데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이 어찌 됐든 돌궐은 애당초 유목민족이 아니라 산지에서 거주하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연제국과 고차 부족연맹체 사이에서 발전한 돌궐

돌궐의 출현 당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는 유연(柔然)제국과 철륵 혹은 고차(高車)로 불린 부족연맹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고차-철륵에 대한 '위서(魏書)'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전형적인 유목민족이었다. 고차라는 이름 자체가 이들이 이동 생활에 이용한 수레의 바퀴가 높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적어도 6개의 씨족 집단으로 구성된 고차-철륵은 지금의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 북부의 톈산산맥(天山

山脈)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당시 몽골 초원을 장악하고 있던 유연제국과 충돌했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돌궐제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주서(周書)’와 ‘수서(隋書)’ 등 중국의 역사서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돌궐 건국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건국 설화에 따르면, 흉노 또는 스키타이-사카의 후손이었던 한 부족이 있었는데 적국의 공격을 받아 온 부족이 전멸당하고 한 아이만 팔다리가 잘린 채 살아남는다. 그런데 암늑대가 나타나 고기를 가져다 아이를 먹여 길렀고, 이후 장성한 아이는 암늑대와 교합한다. 적국이 다시금 침입해오자 암늑대는 동굴로 숨어들어 열 명의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사나(阿史那)라는 성씨를 갖게 된다. 이후 ‘샤드(Shad, 設)’라는 칭호를 얻은 뛰어난 지도자가 수백 가정의 돌궐 부족을 이끌고 동굴에서 나와 금산(金山), 즉 알타이 산맥 남쪽 지역으로 이주한다. 이곳에서 돌궐 부족은 당시 몽골 초원을 장악했던 유연제국을 위해 대장장이로 복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건국 설화를 분석하면서 톨산산맥 동남부, 즉 지금의 투르판(Turfan, 吐魯番) 인근 산악 지대에 거주하던 초기 돌궐 집단이 당시 강성하던 고차와 유연제국 사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알타이산맥으로 이주해 유연제국 휘하에서 철제 무기 및 도구를 제조하는 직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적 권위 증대시키기 위해 늑대를 대표 상징으로 선택
흥미롭게도 돌궐 초기 문장(紋章)을 보면 돌궐 부

족의 창엽 씨족인 ‘아사나’씨는 원래 암늑대가 아니라 다른 동물, 즉 산양(山羊)을 그들의 대표 상징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르판 인근 산지의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산기슭에 서식하는 산양을 토tem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궐 부족집단이 산양이 아닌 늑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톨산산맥 이북에서 유목 생활을 영위하던 고차-철륵 부족 집단이 늑대를 토tem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돌궐을 창엽한 아사나 집단은 늑대를 토tem으로 하는 집단, 특히 고차-철륵 출신과 혼인 등의 방법으로 연합하는 과정에서 늑대의 상징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돌궐이 정치적 권위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토tem인 산양을 버리고 고차-철륵계의 늑대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약했던 초기 돌궐 집단이 생존을 위해 다른 민족의 정치적 상징이나 기호를 차용한 예는 또 있다. 아사나 씨족이 이끄는 돌궐 부족집단이 알타이산맥으로 이주한 이후 한자로 토문(土門) 또는 토무(吐務), 돌궐 자료에는 ‘부민(Bumīn)’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등장한다. 그는 ‘대엽호(大葉護)’ 즉 큰 ‘야브구(Yabghu)’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야브구는 본래 월지-쿠산제국에 예속된 부족집단의 수장을 뜻하는 칭호로, 월지인들의 언어인 토하라어에서 ‘땅 또는 지방’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어 ‘총독’의 뜻으로 사용된 칭호였다.

돌궐은 545년 북중국을 지배하던 북위가 분열되어 만들어진 서위(西魏)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관계



돌궐제국 초기 세워진 부구트 비문. 상부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늑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출처 Kerem Yucel

를 수립했다. 서위 측에서는 중국에 정착한 소그드(Soghd)인 안락반타(安諾般陀)라는 인물을 사자로 보내어 국교를 맺고 유연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서위와의 국교수립에 고무된 돌궐은 550년경 고차-철륵을 공격해 흡수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국가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유연제국 격파한 뒤 유연의 군주 호칭 '카간'으로 불려

이후 토문(또는 부민)은 세력을 키워 당시 몽골 초원을 장악한 유연제국을 정복한 뒤 북위나 유연의 군주들이 사용했던 카간(Qaghan)이라는 칭호도 받아들였다. 중국 측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돌궐의 지도자 토문-부민은 유연제국의 군주에게 공주와 혼인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야브구의 지위를 넘

어 유연제국 카간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돌궐이 명실상부한 유연제국의 중추가 되는 것을 뜻했다. 그런데 당시 유연의 군주였던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 카간은 이러한 돌궐 측의 요구에 “어찌 감히 ‘대장장이 노예(鍛奴)’ 주제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격노한 토문-부민은 552년 군사를 이끌고 몽골 초원을 공격해 유연제국을 격파하고, 패배한 칙련두병두벌 카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그 후 토문-부민은 유연제국의 군주 호칭이었던 ‘카간’, 즉 한자어로 가한(可汗)의 칭호를 취하여 ‘일릭(Ilig, 한자어로 伊利) 카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다양한 상징과 호칭으로 포장한 돌궐의 창업주 토문-부민은 그의 동생 이스테미(Istāmi, 室點密)와 함께 몽골초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권력을 나누어 토문-부민은 제국의 동부를, 이스테미는 제국의 서부를 다스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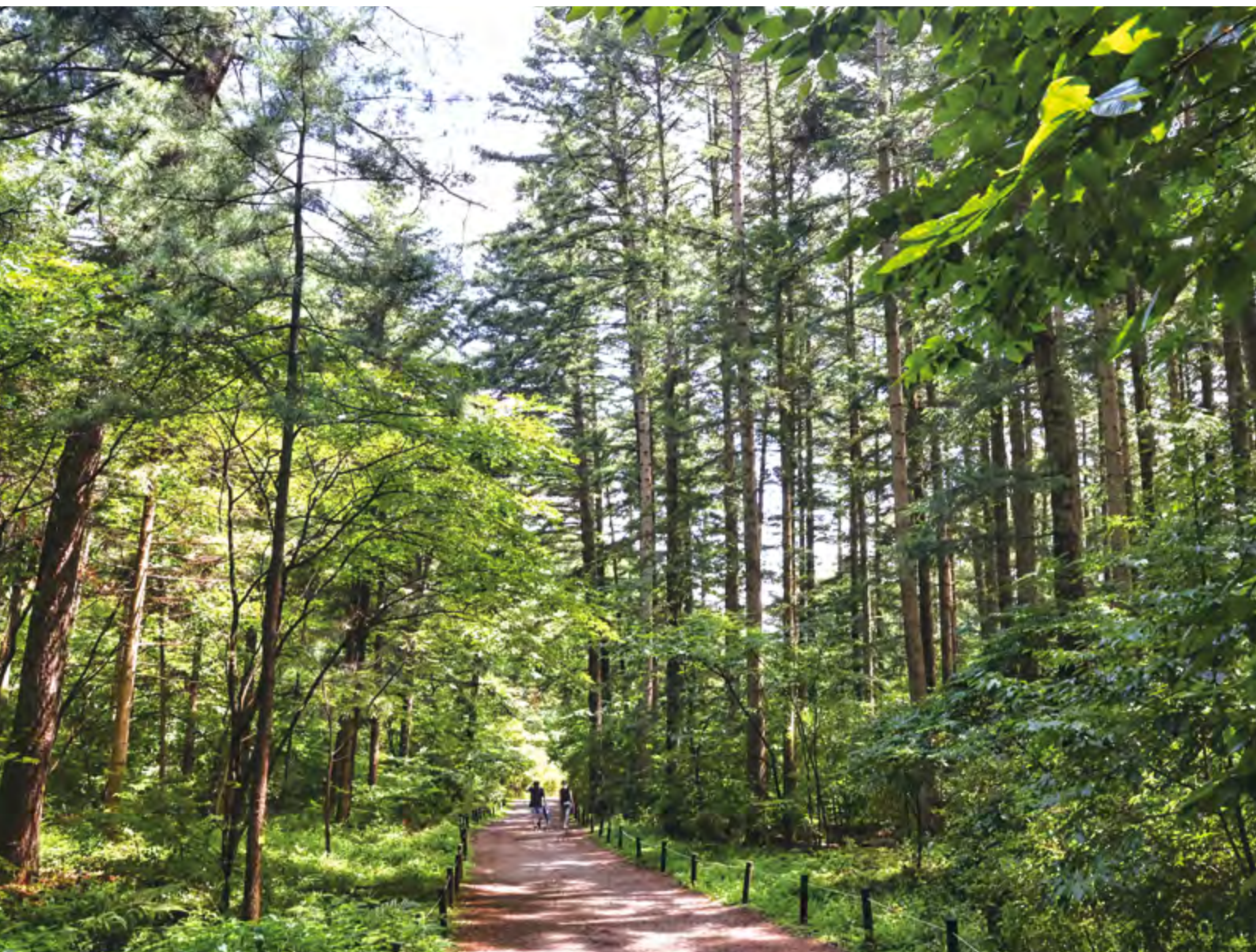
이렇게 주위에 발달한 국가의 문화와 제도를 흡수하는 데 능통했던 돌궐은 결국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선조로 여기는 돌궐제국은 사실 대장장이, 혹은 그 이전에 팔다리가 잘린 채 죽어가던 한 소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했던’ 돌궐제국의 발전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초원이기 기회의 땅이자 세계 제국의 인큐베이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

포천 국립수목원



포천 국립수목원의 전나무 숲길



현무암 위에서 자라고 있는 양치식물들



산림박물관

서울에서 한 시간쯤이면 갈 수 있는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국립수목원으로, 550년 이상 자연 그대로 보전돼 오고 있는 광릉숲을 보호·관리하는 산림청 직속 국립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광릉수목원으로 불렸지만 1999년 포천 국립수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목원에는 식물의 용도, 분류학적 특성 또는 생육 특성에 따라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등 24개의 전문전시원이 조성돼 있다. 총 102ha의 면적에 3천873종의 식물을 식재해 일반 방문객은 물론 식물전공 학생과 전문가들에게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전시원은 관상 가치가 높은 나무를 모아 배치한 관상수원, 꽃이 아름다운 나무를 모아 전시한 화목원, 습지에 생육하는 식물을 모아놓은 습지식물원 이외에도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우리나라 자생 특산식물 400여 종을 전시하는 희귀·특산식

물 보존원, 소리정원, 덩굴식물원, 손으로 보는 식물원, 난대식물 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87년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설명하는 각종 임업사료와 유물, 목제품 등 4천900점에 이르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산림생물표본관에는 국내외 식물 및 곤충표본, 야생동물 표본, 식물종자 등 116만 점 이상이 저장, 관리되고 있고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에는 족보가 있는 열대식물 2천703여 종이 있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취재진에게 수목원을 안내한 김창준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임업연구사는 “국립수목원은 사실 관람뿐만 아니라 광릉숲의 보전,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전체를 다 개방하지는 않고 있다. 후대에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우리 자생 식물만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숲생태관찰로



빅토리아수련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걷고 싶은 길’

국립수목원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보다 다양하게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의 산책로를 만들었다.

사랑이 샘솟는 ‘러빙 연리목길’, 건강을 위한 ‘힐링 전나무 숲길’, 식물 공부를 하기 좋은 ‘희귀·약용길’, 수목원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한 ‘느티나무·박물관길’, 어린이들과 함께 식물 탐구를 할 수 있는 ‘식물 진화 탐구길’, 가족 또는 단체 관람객을 위한 ‘맛있는 도시락길’, 조용하게 혼자 걸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길’ 등이 도처에 조성돼 있다. 각 길마다 총 거리, 시간, 걸음 수, 칼로리 소모 안내가 있어 취향과 체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다.

이중 가장 백미는 국립수목원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전나무 숲길’이다. 100년 전 월정사에서 전나무 씨앗을 받아 키운 묘목으로 조립한 전나무숲과 생태탐방로, 인근의 호수인 ‘육림호’ 둘레길 등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숲으로 평가받고 있다. 육림호

옆에는 작은 통나무 찻집이 있어 걷다 쉬어갈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보호인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3개 구획으로 구분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광릉숲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선정된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릉숲은 일제 강점기 때 산림자원을 수탈당하지 않았고, 한국 전쟁때도 화재가 없어 550여 년간 자연림으로 잘 보존돼왔다. 천연 활엽수림인 서어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는 온대북부의 대표적인 극상림이다. 식물은 946분류군과 동물로는 조류 180종, 포유류 32종, 곤충류 3천986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희귀종으로 식물은 광릉요강꽃, 동물은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까막딱다구리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있다.



수생식물원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원...다양한 전시회 개최

지난 5월 수목원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숲과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는 새로운 교육공간인 키즈아카데미 ‘숲이오래’를 개원했다. 어린이 교육공간인 ‘숲이오래’는 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유아, 어린이 친구들이 다양한 산림생물에 대해 배우고 숲과 더불어 지내는 행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또 수목원은 9월 30일까지 열대식물온실 앞 광장에서 수련의 여왕 ‘빅토리아수련’ 등을 활용한 ‘열대수련 전시회’를 개최한다. 빅토리아수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련으로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잎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제28회 우리 꽃 전시회’

도 개최한다.

수목원에 가려면 홈페이지(www.kna.go.kr)나 모바일웹(reservenew.kna.go.kr), 전화 ARS(031-540-2000)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사전 예약자만 정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입장인원은 화~금요일 1일 5천 명,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일 3천500명이며,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평일 1일 3천 명,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1일 4천500명이다. 운영시간은 4~10월 오전 9시~오후 6시, 11~3월 오전 9시~오후 5시(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 2, 12월 매주 일요일 휴원). 관람료는 어른 1천 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

경기 포천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결핵’



1980년대까지 10대 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한 번쯤 크리스마스 실(Christmas Seal)이라는 우표 모양의 증표를 사야 했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실을 사도록 했던 이유는 크리스마스 실의 판매 수익이 결핵을 치료하는 데에 쓰였기 때문이었다.

결핵은 병균의 일종인 미코박테리움이 공기나 사람의 침을 통해서 폐에 침투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결핵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기침을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데,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기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는 증상을 앓으며 기관지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결국에는 몸이 쇠약해져 죽음에 이른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결핵은 한국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었고, ‘하얗게 변해 죽는 병’이라는 뜻의 백사병(白死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이는 결핵이 과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인 흑사병(페스트)에 비길 만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또한 결핵은 한국에서만 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제 3세계들을 식민지로 삼으며 번영을 누리던 19세기 무렵, 영국에서는 한 해 사망자의 25%가 결핵 때문이었다. 아울러 과학과 의학 기

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던 19세기 독일에서조차 한 해 사망자의 14%가량이 결핵 때문이었다.

이렇게 서구에서 결핵이 크게 번졌던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공해 물질이 포함된 공장의 매연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마구 뿜어져 나왔는데, 이런 매연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만큼 공해에 무지했던 탓이었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 결핵이 크게 유행했었다. 심지어 성공적인 대회라고 알고 있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던 외국 선수들이 “서울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 차라리 일본에 머물면서 경기가 있을 때에만 서울에 오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1904년 덴마크의 아이나르 홀뵐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작은 우표에 그림을 그린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 출시했다.

크리스마스 실에는 십자가가 그려졌는데, 이 십자가는 과거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십자군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십자군처럼 결핵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시였다. 크리스마스 실의 판매 수익은 결핵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곳에 지원됐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만들어

한국에서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셔우드 홀

이 1932년에 처음 크리스마스 실을 발매했다. 이 크리스마스 실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국보인 남대문 그림이 그려졌다. 셔우드 홀은 1940년까지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으나, 당시 한반도를 지배하던 일제는 1941년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반서구 정책의 일환으로 셔우드 홀을 추방했고, 크리스마스 실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인 1949년부터 다시 발행됐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실을 두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크리스마스 실을 사면 결핵이 낫는다는 믿음이었는데, 결핵을 앓던 어느 여성은 크리스마스 실이 결핵을 치료해주는 약인 줄 알고 사서 가슴에 붙였는데 전혀 낫지 않자 크리스마스 실을 판 가게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2021년인 지금은 과거보다 결핵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나, 결핵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다. 결핵은 얼핏 가벼운 병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숨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중요시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무엇보다 길거리에 함부로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는 깨끗한 습관을 지녀야 한다. 🍵

글 도현신 작가

전쟁과 테러의 폭력에 맞서는 씻김의 평화예술

성태훈의 '역사현장-흘러간다'



성태훈 '역사현장-흘러간다'(2005), 한지에 수묵담채, 158×190×4cm

아프가니스탄이 혼돈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은 아프가니스탄 동쪽의 인도와 동아시아 문명과 아프가니스탄 서쪽의 중동과 유럽 문명으로 나뉜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그렇거니와, 근대기만 살펴봐도 얼마나 신산한 운명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다. 19세기부터 영국과 제정러시아의 침탈 대상이었던 이 나라는 20세기 초 영국의 보호국이었다가 독립했다. 20세기 말에는 소련의 침공을 받았지만 9년 만에 물리쳤다. 다시 2002년에는 미국과 영국의 침공을 받았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까지 전쟁에 휘말린 것은 9·11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이 이 나라로 숨어들었기 때문이었다.

2011년에 빈 라덴을 제거한 미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를 결정했다. 예상보다 빨라진 탈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마치 1975년 베트남전 종전 후 사이공 철수작전을 보는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탈레반의 미국 협조자 탄압이나 여성 인권 탄압, 배타적인 이슬람 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부는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수한 난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20세기의 양차 대전에서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인류는 처절한 문명비판을 거치며 평화를 갈구해왔지만, 끝없는 전쟁과 테러 앞에 ‘폭력 없는 평화로운 지구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장탄식이 절로 나온다.

서방 세계와 중동의 충돌로 인한 전쟁이 배경

성태훈이 이 그림을 그린 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5년이다. 전쟁과 테러로 인해 파괴된 삶의 흔적들로 가득한 이 그림은 서방 세계와 중동의 충돌로 인한 전쟁 폭력의 비극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의 제1차 걸프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2001년에 뉴욕 한가운데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9·11테러 이후 2003년에 제2차 걸프전이 발발했다. 베트남전 이후 이처럼 대대적이고 전격적인 전쟁도 드물었던 탓에 걸프만에서의 충돌은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마치 온라인 게임을 보듯, 전쟁의 포화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평화 염원은 한없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성태훈은 이렇듯 비인간적이고 반생태적인 전쟁의 참화가 남긴 폐허를 자신의 그림 속에 오롯이 그려 넣었다.

전쟁의 폐허를 그림에 담아낸 성태훈의 연작은 ‘역사현장-홀러간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폐허와 물 이미지의 결합이다. 2002년 이후 몇 년간 ‘역사현장’이라는 주제로 폐허와 일상의 중층구조를 담아왔던 그는 ‘홀러간다’라는 부제를 더하면서 물 이미지를 등장시켜 씻김의 미학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폐허는 회화의 대상으로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대체로 기나긴 시간을 지나면서 허물어진 문명의 흔적을 통해 시간성과 역사성을 성찰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성태훈이 그린 폐허는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인 작동으로 단숨에 부서지고 망가진 파괴의 현장에서 동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는’ 반전의 메

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폐허 그림은 나아가 석유라는 에너지를 둘러싼 충돌로서의 실제 전쟁을 넘어 금융 전쟁의 전장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메타 전쟁’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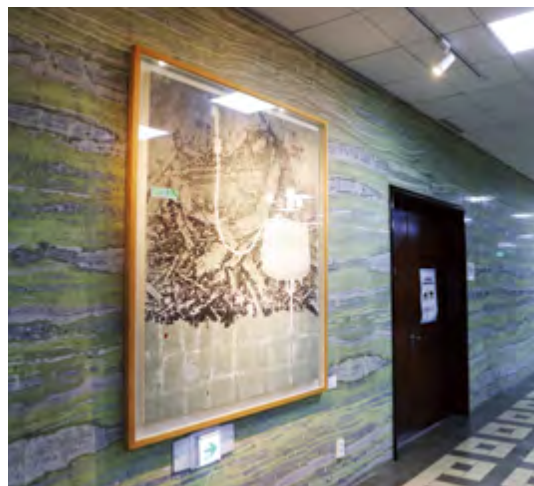
먹으로 찍은 점과 물 통해 상처와 치유의 메시지 결합

성태훈의 작업은 옅은 먹으로 점을 찍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수히 반복되는 점 찍기는 마치 폐허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예술적 제의와도 같다. 그 무수한 점들 하나하나에 성태훈은 전쟁과 테러에 의해 사라져간 영혼들을 불러 모은다. 그 위에 그려질 형상에 의해 지워질 점들이지만, 사라져간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적 행위로서의 점 찍기를 통해 그의 그림은 손재주만 좋은 일필휘지의 먹그림들과는 달리 동시대 삶의 정황을 예술로 끌어들이는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점으로 이뤄진 벽은 전쟁과 테러로 인해 부수진 폐허의 벽이다. 그는 그 폐허 위에 물을 끌어들이는다. 그 물은 샤워기에서 나온다. 일상 생활에 쓰이는 세면대와 샤워기를 등장시킴으로써 성태훈은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폭력의 잔해물들과 일상의 편린을 결합해 폭력과 일상을 중첩한다. 그는 폐허와 물이라는 이원적인 대립항을 통해 어둠과 밝음, 상처와 치유의 메시지를 결합했다.

폐허는 전쟁과 테러의 상처를 드러내는 기표들이다. 물은 생명과 희망을 담은 또 다른 대안이다. 물을 통한 씻김은 상처를 닦고 넘어서고자 하는 치유의 표상으로서 상처의 치유를 갈망하는 동시대의 정

신적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인 의미망 속에 포섭되는 정치적인 물이다. 물을 끌어들이는 성태훈의 폐허 그림은 현실을 투영하는 재현적 형상회화로부터 상처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제의적 형상회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그는 폐허 연작을 통해 수목화를 서정성의 국면에서 서사성의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혼돈을 염려하며, 걸프전 참전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2000년대 초반을 돌아보건대, 성태훈의 이 그림은 예술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폭력 속에서 서로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평화예술의 길이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김지범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앞에 걸린 성태훈 '역사현장-흘러간다'



본회의 장소를 변경해 처리한 헌법개정안(3선개헌)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법안을 다루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사전에 의원들에게 통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의의 소집과정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에게 적법한 개회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로 헌법재판소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제6차 헌법개정안의 사례를 살펴본다.

1969년 8월 8일 제71회 임시국회 첫날 개회식은 열리지 못했다. 오전 9시부터 야당인 신민당 유진오 총재를 비롯해 35명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의 실력저지에 나섰다. 공화당이 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였다.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신민당 의원들은 이날 철야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8월 9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공화당 발의 개헌안을 정부에 직송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에선 개헌안 공고를 바로 의결했으며, 박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고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부서한 다음 즉각 공고했다. 신민당은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을 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임시회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어서 정기회가 시작되어 9월 8일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고 13일 표결을 선포했다. 결국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12시까지 계속 버티기 전략을 펴서 거의 저지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보았다. 그렇게 자정이 넘어서 산회가 됐는데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2시 직후 태평로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회의가 소집됐다. 9월 14일 오전 2시에 본회의 통보를 받은 공화당 의원들과 신민당 의원 3명이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있던 신민당 의원들을 피해 지금의 서울파이낸스센터 자리에 있던 국회 3별관에서 투표를 한 것이다.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개헌안은 통과됐고 이어 실시된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2년 뒤인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53.2%의 표를 얻어 45.2%로 추격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글 김덕진 의정기록과 심의관



경주 석빙고 내부

일상에서 구현해 낸 과학적 원리...
조선시대 석빙고



창녕 영산 석빙고



청도 석빙고

서울 용산구에는 서빙고동(西氷庫洞), 동빙고동(東氷庫洞)이 있다. 조선시대 이곳에 서빙고와 동빙고가 있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빙고는 얼음 저장 창고를 말한다. 빙고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사람들은 얼음저장고를 지어 사용했다. 얼음 창고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어 이를 빙고전(氷庫典)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엔 겨울철 강물의 얼음을 채취한 뒤 이것을 빙고에 잘 보관해 여름에 사용했다. 서빙고는 용산구 둔지산 아래에 있었다. 얼음 창고가 8개에 달했고 국영이나 관청용으로 얼음을 공급했다고 한다. 동빙고는 한강변 두모포에 있었다. 서빙고의 동쪽으로, 서빙고와 가까운 곳이었다. 동빙고의 얼음은 종묘, 사직 등에서 국가적인 제향을 올릴 때 공급됐다. 동빙고 얼음은 서빙고에 비해 양이 적었다. 한양도성 밖에 서빙고와 동빙고가 있었다면 한양도성의 궁궐에는 내빙고(內氷庫)가 있었다. 창덕궁에 위치한 내빙고에서는 궁궐에서 소비하는 얼음을 공급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서빙고, 동빙고, 내빙고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방 곳곳에는 몇 개의 빙고가 남아 있다. 현존하는 빙고는 모두 돌로 만든 석빙고(石氷庫)다. 경북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 1738년), 경북 안동 석빙고(보물 제305호, 1737년), 경남 창녕 석빙고(보물 제310호, 1742년), 경북 청도 석빙고(보물 제323호, 1713년경), 대구 달성 현풍 석빙고(보물 제673호, 1730년), 경남 창녕 영산 석빙고(보물 제1739호, 18세기) 등 6기로, 모두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석빙고는 돌로 반지하(半地下)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모양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무덤처럼 둥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반지하 공간으로 땅을 판 다음 돌로 안쪽 벽을 쌓고 바닥엔 경사진 배수로를 만들었다. 천장은 무지개(홍예, 虹霓) 또는 아치 모양으로 돌을 쌓아올려 만들었고 천장에 환기구멍이 두세 개씩 있다. 반지하 내부 공간은 대체로 길이 12m, 폭 5m, 높이 5m 안팎이다.

얼음이 녹지 않는 비결, '과학적 구조'

그러면 겨울에 채워 넣은 얼음이 한여름까지 어떻게 녹지 않고 견뎌올까.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얼음 저장에 앞서 겨울 내내 석빙고 내부를 냉각시키는 과정이다. 얼음을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얼음을 넣기 전에 석빙고 내부를 차갑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측정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하 0.5℃~영상 2℃.

석빙고가 이렇게 냉각이 잘 되는 것은 석빙고의 탁월한 구조 덕분이다. 석빙고를 눈여겨보면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이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날개벽에 냉각의 비밀이 숨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이 날개벽에 부딪힌다.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 더욱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간다. 석빙고 내부는 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찬 기운을 유지하게 된다. 입구의 창의적인 구조 덕분에 겨울철의 일반적인 공간보다 더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 2월 말 경에 얼음을 넣은 뒤 6월에서 10월까지 4~8개월 동안 차갑게 냉기를 유지하는 과정이다.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까지 녹지 않아야 한다. 전혀 녹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내부를 저온으로 유지해 최대한 녹는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그 찬 기운을 여름까지 유지하는 것일까.

천장의 구조를 보자. 화강암으로 만든 내부 천장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움푹 들어간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내부의 더운 공기를 가두었다가 밖으로 빼내는 기능을 한다. 일종의 에어 포켓(air pocket)

이다. 얼음을 저장하고 나면 내부 공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얼음을 꺼내기 위해 수시로 문을 열고 드나들어야 하니 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더워진 공기는 위로 뜨게 되고 그 순간 에어포켓에 갇히게 된다. 그렇게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석빙고 내부는 초여름에도 섭씨 0℃ 안팎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험 결과다.

차가움의 비밀은 더 있다. 내부 공기가 조금씩 더워지다 보면 습기와 물이 발생한다. 이 습기와 물은 얼음에 치명적이다. 습기와 물은 외부로 빼내야 한다. 이를 위해 석빙고의 바닥에는 약간 경사진 배수로를 만들었다. 또한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에 석회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어 놓았다. 얼음과 벽, 얼음과 천장 틈 사이에는 밀짚과 왕겨, 톱밥 등의 단열재를 채웠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선시대 석빙고에는 이렇게 2중, 3중의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그 덕분에 석빙고는 한여름에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6개의 석빙고 가운데 경주 석빙고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길이 14m, 폭 6m, 높이 5.4m로, 규모도 가장 크며 외형도 온전하다. 안동 석빙고, 창녕 석빙고, 달성 현풍 석빙고, 창녕 영산 석빙고도 외부의 봉분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주 석빙고만큼 온전하지는 않다. 청도 석빙고는 봉분은 사라지고 돌의 구조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경험과 직관에 기초해 과학의 원리를 일상 속에서 구현해낸 석빙고. 조선시대의 과학적 성취가 돋보이는 소중한 흔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온전한 형태의 경주 석빙고든 뼈대만 남은 창녕 석빙고든 모두 매력적이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맥문동’

맥문동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다년생 풀입니다. 여러 포기가 모여 무리를 이루며 여름에 보라 꽃방석을 깔아놓은 듯 꽃이 피고 곧이어 콩알 굵기의 둥그란 초록색 열매가 달립니다. 익으면서 열매는 진한 검자주색이 됩니다. 맥문동(麥門冬)이란 이름에는 뿌리가 겨울 보리를 닮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약으로도 쓰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경북 영양 주실마을의 조지훈 생가

‘승무’의 시인 조지훈의 고향 주실마을에서 성북동까지

조지훈 문학기행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에 가을 햇볕이 고였다. 마을 어귀 ‘주실숲’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초록으로 빛난다. 마을은 조지훈 시인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숲속 시비와 지훈시공원, 지훈문학관, 시인이 태어난 집은 물론 마을 골목을 거니는 사이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고향 마을을 뒤로하고 조지훈 시인은 17세에 상경한다. 그가 살던 성북동 집은 사라졌지만, 집터 언저리에 세워진 꽃돌에 적힌 그의 시 ‘승무’를 읽는 가을 어느 날이 좋았다.

주실숲 안의 조지훈 시인 시비

읍내를 벗어난 시골 버스가 속도를 낸다. 덜컹거리는 버스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본다. 낮은 산과 산 아래 웅기종기 들어앉은 집들, 마을 앞 논과 시냇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시골 풍경이 고향처럼 푸근하다.

정류장을 알리는 버스 안내방송이 덜컹거리는 차 소리에 잘 들리지 않는다. 옆에 앉은 할머니께 주실 마을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여쭙니 당신 내릴 때 따라 내리라신다. 새하얀 머리를 짧게 잘라 곱게 빗어 내린 할머니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이다. 인연처럼 만난 할머니는 벌써 보이지 않는다.

마을 어귀에 있는 '주실숲'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다. 사람의 손때 묻지 않은 천연의 숲 옆에 100여 년 전에 소나무를 더 심어 가꿨다. 공기도 초록으로 빛날 것 같은 숲은 2008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숲에 1982년 조지훈 시인의 시비가 세워졌다. 시비에는 그의 시 '빛을 찾아 가는 길'이 새겨졌다.

'주실숲'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간다. 산기슭 아래 기와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그 앞에 논이 넓게 펼쳐졌다. 논 앞에는 작은 냇물이 흐른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었던 시절,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풍경인 '배산임수 문전옥답'의 형국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에 놓인 다리를 건너 가을 햇볕 가득 고인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집들은 대부분 기와집이다. 넘실대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겹친 풍경에 마음을 뺏겨 마을 곳곳을 돌아봤다. 마을에는 오래된 집이 세 채 있다. 호은종택은 주실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전의 둘째 아들 조정형이 인조 때 지은 집이다. 한국전쟁 때 일부 소실된 것을 1963년에 복구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78호다. 옥천종택은 17세기 말에 건립됐다. 한양 조씨 옥천 조덕린이 살던 집이다. 조덕린은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교리와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42호다. 옥천 조덕린의 손자인 월하 조운도의 발의로 한양 조씨, 야성 정씨, 함양 오씨가 주축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조선 영조49년(1773년)에 건립한 월록서당도 있다. 그중 호은종택은 조지훈 시인이 태어난 집이다.



주실숲에 있는 조지훈 시비



주실마을에서 지훈시공원으로 가는 길. 산기슭에 조지훈 동상이 보인다.



지훈시공원

크레파스로 쓴 시집 제목 ‘풀잎단장’

마을 구경을 마치고 마을에 있는 지훈문학관을 찾았다. 문학관에 전시된 유품과 안내 글에서 조지훈 시인의 일생과 문학세계를 보았다.

조지훈 시인은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피터팬’ ‘파랑새’, ‘행복한 왕자’ 등을 좋아했다고 한다. 문학을 좋아했던 친형의 영향으로 조지훈 시인도 문학의 꿈을 키우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1936년 상경했다.

조지훈은 19세에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를 통해 문단에 이름을 올린다. 당시 ‘문장’지를 통해 등단하려면 세 번 추천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 시가 ‘고풍의상’이었다. 고려대학의 계간지 ‘고대문화’에 실린 조지훈의 글에 따르면 강의시간에 쓴 것을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는데 뽑혔다. 그 다음에 낼 시를 준비해야 했던 조지훈은 그해

11월에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로 시작하는 시 ‘승무’를 완성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0년에 ‘봉황수’로 마지막 세 번째 추천을 받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조지훈은 공동시집인 ‘청록집’을 1946년에 출간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대구에서 그의 첫 개인 시집인 ‘풀잎단장’을 낸다. 표지 제호는 당시 일급살이었던 조지훈의 큰아들이 크레파스로 썼다.

조지훈은 22세 되던 해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간다. ‘고대문화’에 실린 그의 글 ‘나의 역정에 따르면’ ‘자기 침잠의 공부에 들었던 시기’였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다. ‘문장’지가 폐간되었고 일제의 상가포르 함락을 축하하는 행렬을 월정사 주지에게 강요한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고 목 놓아 울다가 졸도하기도 했다. 그



지훈시공원에 있는 조지훈 시비 승무와 조형물



지훈문학관에 있는 청록집

렇게 병을 얻은 그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한 조지훈이 찾아간 곳이 경주에 살던 박목월의 집이었다. 조지훈의 시 '완화삼'에 박목월은 '나그네'로 화답했다는 일화가 이때 생기게 된 것이다.

문학관을 나와 향한 곳은 '지훈시공원'이었다. 공원에 조지훈 시인의 동상과 시비, 조형물이 가득하다. 공원 옆 숲 기슭에도 그의 시비가 놓였다. 시비에 새겨진 시를 하나하나 읽는 동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지훈시공원'에서 내려와 마을 앞 개울가 길을 걸었다. 코스모스 피어난 길에서 서서 어둠이 내리는 시인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서울 성북동에 남아 있는 시인의 흔적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조지훈 시인이 살던 집터가 있다. 그곳에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시인이 모여 시를 이야기하던 눈 오는 성북동의 밤이 있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직진한다. 약 650m 정도 거리에 조지훈 기념 건축조형물 '시인의 방-방우산장'이 있다. 격자무늬 문틀과 마루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작은 나무의자를 여러 개 놓았다.

조지훈 시인은 자신이 살던 집을 '방우산장'이라고 불렀다. 그의 글 '방우산장기'에서 그는 방우산장이라는 말을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가 있는 자리'라고 풀어내고 있다.

조형물에 놓인 의자는 생각의 공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격자무늬 문이 열린 방향이 조지훈이 살던 집이 있던 쪽이다. 문 옆에는 그의 시 '낙화'가 적혀 있다.

'시인의 방-방우산장'에서 약 150m 정도 거리에 시인이 살던 집터가 있다. 조지훈 시인이 '문장'지를 통해 문단에 오를 무렵 살던 집이 성북동 집이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고 옛 집터 언저리에 조지훈 시인이 살던 곳을 알리기 위해 꽃돌을 세웠다. 꽃돌에는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가 적혀 있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사람이 어느 날 성북동에 있는 조지훈의 집에 모였다. 을유문화사에서 세 사람 시를 모아 합동시집을 내기로 했고 세 사람은 성북동 조지훈의 집에 모여 시집에 실릴 원고를 골랐다. '청록집'이라는 제목은 박목월이 붙였다. 그날 밤 성북동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번역 투’를 그대로 써도 될까?

공문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표현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독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독자에게 친숙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복잡한 표현보다는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투 중에 아무리 친숙하게 느껴지더라도 추상적이고 복잡한 표현은 잡초를 뽑듯 쏙아내야 한다.

- (1) (이 캠페인은)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한 신청과 우편 발송을 통해 코로나19의 시기적 한계를 넘어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 8. 10. 보도자료) →
- (2)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 발표하고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신진연구원으로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울산시청, 2021. 8. 10. 보도자료)

공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을 통해’는 영어 ‘through’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 투인데, 예문(1)과 예문(2)의 ‘을 통한’과 ‘을 통해’는 그 뜻이 제각각이어서 굳이 ‘통하다’를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차라리 예문(1)은 ‘(이 캠페인은) 캠페인 공식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로 다듬고, 예문(2)는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신진연구원으로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로 다듬는 것이 어떨까?

- (3)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10. 12. 시행)
- (4)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시행)

예문(3)에 쓰인 ‘에 의하여’와 ‘에 대하여’, 예문 (4)에 쓰인 ‘에 관하여’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 투다. 국회 법제실, 법제처, 국립국어원은 2019년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들 표현을 남용하지 말고 ‘~에 의하여’는 ‘에 따라’ 등으로, ‘~에 대하여’와 ‘~에 관하여’는 ‘~에/에게’ 등으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예문(3)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을 준공하면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로 다듬고, 예문 (4)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다듬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만약 번역 투가 친숙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그대로 쓰면 된다. 설령 번역 투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말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박병석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운영소위,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처리

8월 1일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 사퇴

8월 3일

-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국민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당부

8월 4일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

8월 9일

- 국민의힘,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에 입장표명을 촉구

8월 10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8월 13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로 출소
- 박병석 국회의장,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 김부겸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

8월 17일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공식 선언

8월 19일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대선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8월 20일

-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
- 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호 의원의 탈당 권유 조치 철회

8월 23일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 외교통일위원회,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

8월 24일

- 여야 국회의원 24인,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
- 세종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

8월 25일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선언

8월 26일

-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지역구 의원 공천시 여성 30% 이상 추천 의무화 등 권고
- 한국 도운 아프카니스탄 난민 380여명 인천공항 입국

8월 27일

- 정부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9월 작품전



I Wanna Hold Your Hand

2021. 9. 2. - 9. 29.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 〈I Wanna Hold Your Hand〉 등 회화 9점, 설치작품 1점

작가 : 김학철 / 추천 : 남인순 의원실 / 문의 :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4394

〈편집후기〉

무더웠던 여름 공기가 서늘한 바람으로 바뀌며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9월입니다. 이달 국회보는 각 상임위원회의 정기국회 현안을 미리 살펴보면서 100일간의 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국회보도 알찬 결실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 김현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호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포부 등을 실었습니다. 국회보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고영선

처서가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제21대국회의 두번째 정기국회입니다. 독자 여러분 코로나도 무섭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 박민선

‘칭찬합시다’ 번외 편으로 우리 국회보팀을 칭찬합니다. 이번 9월호는 다른 달보다 책이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많은 것을 담느라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분주했던 한 달, 우리팀에게 “정말 수고했다, 완전 잘했다”며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 윤성혜

TV로도 즐기고
폰으로도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

IPTV
olleh tv
65

IPTV
SK Broadband B tv
65

IPTV
U tv
172

skyLife
165

케이블 방송
지역에 따라 채널 번호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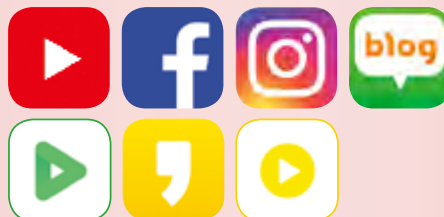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국회방송 앱



●소셜미디어 채널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